

---

완전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점검보고서

---

2019. 01. 15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요약

1부. 총괄

1절.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3  
2절.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이행상황의 점검 ..... 7

2부. 목표 및 전략별 도정과제의 점검

1절.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13  
    전략 1. 경남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 13  
    전략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확대 ..... 27  
    전략 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 35  
    전략 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 41  
2절. 사람 중심 경남복지 ..... 46  
    전략 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강화와 공공의료체계혁신 ..... 46  
    전략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 52  
    전략 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 57  
    전략 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 64  
    전략 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 68  
3절.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72  
    전략 1.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만드는 사회혁신 ..... 72  
    전략 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체계구축 ..... 77  
    전략 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 80

### 3부. 중점과제 점검

중점과제 1.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87
중점과제 2. 사회적 가치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87
중점과제 3. 서부경남 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	88
중점과제 4.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89
중점과제 5.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	89
중점과제 6. 저출산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기반구축 .....	90

### 4부. 점검결과의 요약과 제언

1절. 점검결과의 요약 .....	95
2절. 제언 .....	99
3절. 자문위 운영의 개선사항 .....	102

### 부속 문건

1절. 기술변화가 경남에 미치는 영향 .....	107
3절. 조선산업 위기대응 .....	109
3절. 스마트 일자리 .....	110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	114
----------------------------	-----



요약



## 요약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 정치적 동향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를 통한 신임 도지사의 취임
  - 도지사 공백상태로 인한 파행적 도정운영의 정상화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초의 도지사취임
  -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 반영
  - 경남의 유권자 투표율 65.8%, 도지사 득표율 52.8%
  - 한국의 지방정치 지형을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
- 도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분포변화
  - 경상남도의 역대 도의회 의석분포의 획기적 변동
  - 역대 경상남도 도의회: 보수정당(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의 절대우위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에 의한 도의회 정당분포  
더불어민주당 34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 역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보수정당(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의 절대우위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분포  
18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7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출신 당선
-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도정수행능력평가
  - 도지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신뢰: 도정운영의 중요요소
  - 한국갤럽(2018.12):도정수행능력평가  
긍정 49%, 부정 22%(전임지사: 긍정 30%대, 부정 50%대)
  - 리얼미터(2018.12):도정수행능력평가  
긍정 47%(11월 조사 47.3%)  
주민지지확대지수(득표율을 긍정평가율로 나눈것) 89.0,(전국평균 79.5)
- 대통령에 지지도 변화와 도정
  -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김경수도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
  -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추세
  - 최근(2019. 1월 첫주)조사에서 소폭의 회복추세

-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와 도정운영과의 관계는 쌍방적

## 경제적 동향

### ● 전반적 경기상황

-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3.7%(중국6.2%, 미국 2.9%, 일본 1.1%/한국 2.7%)
-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3.7%(IMF예측): 중국, 미국, 일본은 성장세 둔화
- 우리나라의 2019년 경제성장률 2.6-2.7% 전망
- 경남의 경제성장률 2010년까지 전국평균 상회  
2010년 이후 전국평균 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 지속
- 2019년 부울경 경제성장률 1.7%로 예상됨(2016년부터 0%대의 성장률)  
동남권지역의 성장회복세가 예상되나 전국 경제성장률에 밀림

### ●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현황

- 경남의 주력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조선등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
- 조선산업의 급격한 위축 기계,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경향
- 대한상공회의소 2018년 분기별 경기전망지수(BSI):  
3분기, 4분기에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최하치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산업의 쇠퇴와 직결
- 조선산업 최근 활발한 수주: 2019년 6년 만에 플러스 성장전망  
고용노동부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업계 상생 협약에 대한 지원

### ● 고용 및 일자리 현황

-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임금근로자의 비중 지속적 하락(2015년 70.4%, 2016년 68.2%, 2017년 67.3%)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2015년 29.6%, 2016년 31.8%, 2017년 32.7%)
-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30% 후반의 낮은 수준으로(2017년 전국 13위)  
2018년 청년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여 40%에 진입
- 고용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79.8%의 응답자가 심각하다는 응답

## 지역주민 동향

### ● 김경수 도정에 대한 기대

- 65.8%의 높은 투표율, 52.8%의 득표율: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
- 도정수행능력평가: 긍정평가 49%, 부정평가 22%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도지사와의 접촉도 높아짐



- 주요 사항에 대한 경남도민의 인식도(2018년)

- 주민생활만족도: 만족 51.8%, 불만족 43.6%(전국 평균, 만족 53.0%, 불만족 41.1%)
- 자긍심: 62.0%가 자랑스럽다고 응답
  - 계속 거주 의사: 78.6%가 긍정적인 응답
-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도: 안전 18.6%, 불안 31.0%
- 미세먼지: 불안 79.4%(전국평균 82.5%)
-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57.5%, 불만족 2.4%
-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56.6%, 불만족 5.5%(전국평균, 만족 58%, 불만족 4.6%)
- 녹지환경 만족도: 좋다 61.3%, 나쁘다 8.1%(전국평균, 좋다 50.2%, 나쁘다 12.2%)
- 사회적 계층의식: 상류층(2.3%), 중류층(69.9%), 하류층(27.8%)
- 사회적 관계망(SNS) 이용률: 54.9%(카카오톡 30.2%, 페이스북 27.0%, 밴드 25.8%)
- 참여율: 도정참여율 3.6%, 사회문제참여율 5.3%, 자원봉사참여율 14.5%

## 2)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이행과제의 점검

### 도정 4개년계획의 확정과 추진 경과

- 도정4개년계획의 확정

- 2018. 8. 16. 「도정4개년계획」 공식 확정(홈페이지게시)
- 비전: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운영원리: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
- 3대 목표: '다시 뛰는 경남경제', '사람중심 경남복지', '함께여는 혁신도정'
- 12개의 전략과 46개의 과제 도출. 6개 중점과제 선정

- 도정4개년계획의 1차년도 추진경과(2018.9~12)

- 140개의 세부과제 도출
- 140개에 대한 고유번호부여 관리(목표-전략-과제-세부과제의 순)
- 예: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이1-1-1-①)
- 「도정4개년계획 이행계획」 책자로 발간(2018년 10월)
-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책자 발간(2018년 12월)

### 이행상황의 점검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준비

- 「경상남도도정자문위원회」(2018.11.15.) 발족: 자문위원 30명

- 「경상남도도정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 구성  
운영위원회, 경제혁신분과, 민생분과, 문화복지분과, 사회혁신분과
- 운영위원회 워크숍(2018.12.19.-20):도정과제 점검방법과 절차논의
- 1차년도(2018년) 점검작업 수행

● 이행상황의 총괄점검

- 139개 과제 정상추진 착수(1개과제 검토중: G-MBP개발 과제)
-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중점추진과제)의 성과가시화  
도지사의 역점+지역주민과 지역정치인의 협력+대통령지역공약
- 기구의 설치, 제도의 정비 등 기반적인 성격의 과제: 상당한 진척
- 대부분의 과제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기상조: 일정한 기간 필요
- 1차년도 과제점검활동의 의미:
  -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상황점검
  - 향후 보완사항의 확인과 반영
- 과제추진시 역점사항: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
- 2차년도(2019년) 이후의 과제점검활동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점검활동
  - 과제추진진도의 면밀한 파악(준비단계, 착수단계 성과실현단계, 정착단계)
  - 과제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의 중점 검토
  - 이해관계집단의 만족도 파악(현장에서의 만족도)

### 3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전략 1: 경남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구분	점검항목	진단	자문위 의견
과제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7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노력(중앙부처, 정치권, 예산 심의 과정), 성과가 상당 정도 있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도지사 &amp; 부지사 &amp;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li> <li>○ 도 차원의 마스터플랜 등 계획수립과 대응 조직 필요(편딩 추진 체계적인 조직을 제시하고 운용할 필요)</li> </ul>
	경제혁신 추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기능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평가·성과관리이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하여 긴장도가 더 높다는 것 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위가 실질적인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정책검토, 제안, 정책에 반영, 모니터링)</li> <li>○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편딩에서 경제혁신 추진의 중심 축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li> </ul>

구분	점검항목	진단	자문위 의견	
과제1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경제 혁신 추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지사가 참여 추진위 성과는 경남도의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학습, 담당실국에서 생산한 자료에 대한 검토, 도지사 당부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과활동의 강화를 통해 회의자료의 생산(기획), 제안된 자료의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li> </ul>
		산업지 역별 고용실 천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12월 경남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본부(본부장:경제부지사) 가동 중</li> <li>○공약에서 제시한 일자리종합대책수립 실무TF 구성,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등으로 과제 달성 조직, 추진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목표로 제시된 '경남형 일자리 모델'의 정립을 위하여 스마트 일자리, 스마트산단 등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시행과 개발이 필요</li> </ul>
과제2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핵심 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르네상스 각 산업분야별로 2022년 6월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li> <li>○이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총 1조 1,495억원 정도 투자를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산단, 대형R&amp;D 프로젝트 등이 많고, 예비타당성검토 등 여러 절차가 있으므로 산업분야별로 이 과정을 기획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li> <li>○실제 사업선정 시 프로젝트를 운영, 사업담당구조 등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기존 유사 사업들은 대부분 TP에서 주도)</li> </ul>
		G-M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사업 구조는 스마트공장 구축하는데 모든 사업비를 소진하는 구조임</li> <li>○스마트산단 및 기타 사업들 안에서 쪼개져서 사업추진 중이어서 통합추진체계 형성 안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통합추진체계 마련</li> <li>○G-MBP 정부 정책방향과 관련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파악</li> <li>○스마트제조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선진국형신산업 육성 추진 필요</li> <li>○섬유산업을 대상으로 대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경남형 G-MBP 개발 필요</li> </ul>
		스마트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보급정책에 따라 추진 중.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리는 등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음</li> <li>○너무 성과(숫자) 의존적이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미자격 기업 혜택, 중복지원 문제 등)</li> <li>○공장설비의 디지털+지능화(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위주. '사람'과 일터(작업환경과 방식) 혁신이 누락</li> <li>○경남형 일자리 모델로 홍보되고 있으나, 아직 추진 초기단계이고,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진단제도 통과기업에게만 사업추진, 사전진단팀 인원보강 및 교육 강화</li> <li>○대상기업 선정과정, 구축 이후 등에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현장점검 일상화</li> <li>○Reference Model(참조모델)을 정형화</li> <li>○경남특화 스마트공장 모델에 대한 고민 필요, 즉 '일터/작업자의 스마트화+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추가 정책 기획에 대한 검토 필요</li> <li>○인력양성종합계획, 관련TF, 스마트론 등 추진확인 필요</li> </ul>

구분	점검항목		진단	자문위 의견
과제2		스마트 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단고도화를 통한 제조업혁신이 목표. 현재는 담론 수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19년 2개. 총 10개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형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 (18.11) 작성여부확인</li> <li>○ 정부의 스마트산단선도프로젝트 철저 대비 필요</li> <li>○ G-MBP와 연계 추진 필요</li> <li>○ 스마트산업단지재생 시범사업 추진체계 마련</li> <li>○ 산업부, 국토부, 문체부, 지방정부의 관점을 통합한 ‘통합추진단’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 사업 확충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경남형 “i4.0제조업 혁신 센터”등 추진위에서 검토된 의견, 후속조치 없음</li> <li>○ 전문인력 양성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청년일자리(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음</li> <li>○ 제조업스마트화, 경남형 일자리,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연계, 제조+ICT기업 육성, 인력양성체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TP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중심의 사업추진, 기추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보완 가능</li> <li>○ 추진위에서 제안된 제안과 그안의 인력양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화(혁신성장분과 주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li> <li>○ 스마트 관련 인력양성의 경우 전문인력 4,400명(22년까지) 등 너무 성과에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li> <li>○ 이행계획은 운영인력 양성에 초점을 있으나 대학의 역할이 약함. 경남TP(혹은 신설조직)가 주도, 대학을 포함한 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통합관리 역할 부여, 중복 방지, 교육생구축기업 육성, 컨설턴트 활용, 운영인력 활용 일자리창출과 연계 필요(그림 1참조)</li> </ul>
과제3	R&D체계 혁신과 광역연구 플랫폼 구축	R&D 체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형R&amp;D체계구축’ 및 세부 과제 1-3 (R&amp;D핵심역량확충,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R&amp;D주체간 협력강화)은 충실히 반영 추진 중</li> <li>○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단순 매칭만 수행, 투자의 전략성 부족</li> <li>○ R&amp;D기획·관리 전담기관이 없으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등 중앙정부 조직·사업에 의존</li> <li>○ 지역 R&amp;D 역량을 강화라는 관점에서 자체적인 기획, 전략 기능 확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R&amp;D역량을 강화를 위한 TP의 역할(비대화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정부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신규 조직을 발굴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li> <li>- 가칭 경남과학기술위원회(중기부, 산업주, 과기부 등 중앙부처 사업평가 조직까지 포괄)</li> </ul> </li> <li>○ (동남권) 대형 국책 R&amp;D사업 발굴 및 수행 등의 현실성 검토(지역간 협력의 현실적 어려움)</li> <li>○ 4번째 과제인 ‘국가 R&amp;D혁신방안 연계한 지역주도형 R&amp;D 혁신역량 강화’역시 기획과 모니터링이 필요</li> </ul>

구분	점검항목		진단	자문위 의견
과제3	R&D체계 혁신과 광역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화 목적기반R&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R&amp;D사업화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음</li> <li>R&amp;D사업화 지원 1년 20건 목표 등은 대체로 적절. 경남 테크노파크에 1층에 센터가 설립(2018.10.26.)되어 운영 중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R&amp;D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 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과제(공약 등) 등과 연계가 중요. 실국간 협의를 통한 체계화 필요</li> <li>중앙부처 국비 건의 및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R&amp;D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li> </ul>
과제4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물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공약 등 구상시 과제의 중장기적 효과, 다른 사어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여부</li> <li>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교류협력 확대 대비, 경남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과 연계 등 과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li> <li>부산신항 경남지구의 스마트화와 연계하여 추진</li> <li>항만 물류에 대한 주도적인 능력 배양, 전문성 함양에 의의가 큼. 따라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청내의 관성, 중앙정부의 지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음, 도의 적극적인 의지로 수행 필요</li> </ul>
과제5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 예정</li> <li>2019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 80억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도정자문위에서도 도민의견 적극 제시, 기대효과외의 경우 부정, 긍정의견 동시 제시, 기대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 필요함을 강조</li> <li>예타 면제 통한 SOC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고 동사업의 효과, 지역민들의 제안과 반응 등을 검토하는 연구 필요</li> <li>경남발전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 의뢰 제안</li> </ul>
과제6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 경제권 구축	혁신도시 시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li> <li>혁신도시발전계획수립용역완료(2018.10),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완료로 2019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그러나 동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여부 불투명</li> <li>항공우주의 경우 진주-사천, 사천-고성간 지역 갈등이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위원회에 대한 활동상황 점검(도), 자료 공유요구(자문위)</li> <li>관련 위원회 활동 및 혁신도시 시즌2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도지사외 지자체 장관의 정례 회의, 행정혁신과제와 협의)</li> <li>갈등 혹은 분쟁 해결에 경상남도의 조정 등 적극적 역할 필요</li> </ul>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 향후 남북경제협력 대비, 호남 동부권과 협력을 통한 경제권 확장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의의가 큼</li> <li>현재까지 관련 전문가 자문, 산업육성 기반조성 용역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거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희유금속 자원 조사 및 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세라믹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공약(I-1-6-④)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li> <li>전남 동부권과 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경상남도의 로드맵 작성 필요</li> </ul>

## 전략 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구분	점검항목	내용
과제7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부진에 따른 협약기업의 협약청년 미채용 문제 발생에 대해 채용실적이 없는 기업은 자동 협약해지를 넘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li> </ul> </li> <li>○③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성과의 내실(양질의 근로조건 지킴이 활동과 조사 결과)를 기대 곤란함</li> </ul> </li> </ul>
과제8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게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소상공인, 노인 등 대상집단별로 지원서비스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확충 계획이 '정상' 추진</li> <li>○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국비 고용장려금에 추가로 도비를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고용촉진효과에 대한 도 차원의 점검 평가가 요청됨</li> <li>○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노인 등 대상집단별로 지원서비스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확충 계획 (이를테면, 신중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기관 선정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집단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역 지방정부로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li> </ul>
과제9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 공모에 경남이 선정되었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노력 요구됨</li> </ul>

### ● 일자리 목표에 대한 제언

-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고려 미흡
  - '종합대책'의 고용률(15~64세) 목표 설정은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라는 고용률 정의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8년 2,370.9천명에서 '22년 2,414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의 경남 장래추계인구(15~64세)는 '18년 2,402.1천명에서 '22년 2,344.9천명으로 -2.38%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 15~64세 생산가능인구중 군입대자나 교도소 재소자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숙박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통계청의 15~64세 장래추계인구와 같은 성장률로 증감한다고 가정하면, 경남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8년 2,343.7천명에서 '22년 2,286천명으로 -2.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고려하면 고용률 목표 상향 조정 요
  - 만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을 수정한다면, '종합대책'의 취업자수(15~64세)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민선7기 고용률(15~64세) 목표는 '22년 당초 57.9%가 아니라 71.6%로 상향 조정이 요망됨

### ● 조선업 일자리를 위한 RG 발급제도 개선 정책 제언

- 대기업과 비교하여 더 나은 또는 동등한 건조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본 및 자산의 규모가 작아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지 못해 건조가 무산되는 중견, 중소조선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견중소조선소에 RG를 발급하는 금융사의 리스크를 완화하기위해 중견, 중소조선을 위한 건조컨트롤타워로 선박건조보증공사 설립 (지원)

### 전략 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 경제

구분	점검항목	내용
과제10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로페이 및 사랑상품권 정책의 수혜자가 소상공인들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령 동일 지역에 위치한 '이업종' 소상공인들이 서로간에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게끔 하는 방식(가령 물품/서비스의 상호부조형 구매) 등</li> </ul> </li> <li>○제로 페이 및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정책의 이행과 결합되어, 경남도의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조직화(상호부조 공제조합 + 협동조합)하는 정책사업 병행 필요</li> <li>○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업종별로 조직화(업종별 공제조합-협동조합)하는 사업의 보완 추진이 향후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상호부조 + 자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유도</li> <li>○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별 직업훈련/재훈련'정책사업(신규 사업 기획)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추가적인 보완 정책사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고용보험료 50%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이 자영업주의 비즈니스 관련 직업/숙련 교육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절실</li> </ul> </li> <li>○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소상공인 대상) 사업 주체를 공공(도, 시군)에서 민간(업종별 소상공인 공제조합/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중기 계획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곤란의 하나가 적절한 직업 훈련/재훈련의 부족/결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들에 특화된 직업 훈련/재훈련 정책사업과 동 사업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추가적 기획이 필요</li> </ul> </li> </ul>
과제11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금융복지제도 확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도의 지역경제 불황과 실직자 증가로 인한 채무자 증가를 고려할 때,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이행계획으로는 미흡</li> <li>-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관리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규제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획이 필요함</li> <li>- 또한 장기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채권추심업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책이 추가적·보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음</li> </ul> </li> </ul>

구분	점검항목	내용
과제12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시설·설비 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확대: 이차보전 방식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적극적 산업전략과 결합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으로 그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경남도가 기획하는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금융 자금 공급을 늘리는 보완적 기획이 필요함</li> <li>- 동 사업이 매년 수백억 (2022년 449억, 2027년 541억)의 이차보전금(즉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기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적극적 산업금융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li> </ul> </li> <li>○ 경남 청년 채용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환경개선 지원금이 잘 운영되도록 철저한 감독 필요</li> <li>-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결합하는 사업과 예산 기획 새롭게 보완 요</li> </ul> </li> </ul>
과제13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민관추진단을 만들어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관련 조례 제정 작업 중. 기존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여 책임있는 도정 실현 토대 마련. 또한 경남사회적경제5개년 계획 작성(19년 2월말 발간 예정).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추진중</li> <li>○ 진단의견: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청년 중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치 강화 필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li> </ul>

#### ■ 전략 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구분	점검항목	내용
과제14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과제1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공익형 직불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국민의 신뢰도 제고, 농촌마을에 정주하는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li> <li>- 공정한 마을 선정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한 추진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함. 컨설팅 중심으로 활동 장려</li> </ul> </li> </ul>
과제16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형 스마트팜 조성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농업농촌 주요과제 중 현장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니만큼 도지사께서 직접 챙기고 참여하는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주요 현안과제로 설정 후 내실 있는 토론을 전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li> </ul>



구분	점검항목	내용
과제17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 농정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을 통해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정책력과 실무력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협력을 가능케 할 사무국(혁신추진단) 형태의 추진체계가 없음. 기존의 위원회 형태와 차별성 없이 정기적인 협의만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지향하는 농정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음. 특히 서부청사에 입지를 두고 있는 농정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도지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농업농촌정책 보좌단위의 강화가 요구됨</li> <li>○ 농정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농특위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며 해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경남형 농정협치기구의 자리매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는 ‘민관 공동참여 정책추진단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li> <li>○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미설치 지역의 현장 이해도가 현저히 낮으며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존함으로 시군 현장설명회(전체 이장단교육, 농업인단체 초청 주요농정현안 설명회 등)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군별 현장 설명회 진행 이후 관심 지역부터 간담회, 설립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듯함</li> </ul>
과제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 4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 전략 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공공의료체계 혁신(경남 스마트케어 체계 구축)

- 도내 308개 전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경남형 치매관리제 사업 진행 중,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 선정
  - ‘경남스마트케어’ 4개년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도시형, 농어촌형, 혼합형) 필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보건직 등 증원과 치매관리 4개년 계획 수립

### ■ 전략 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창원/진주/김해 3개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중, 생활임금은 시작 못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중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 여성특보 신설, 경남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예정, 여성정책 연구 전담기구 재단형태 설립 추진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감정노동자 정책 관련 예산 확보 및 생활임금 정책연구 필요
- With you(시군)사업 및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사업비,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확대
- 장애인인권보장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위한 장애인당사자, 교수,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장애인 고용 및 최저임금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 촉진 정책필요

### ■ 전략 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 최적의 대기질 관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관리, 수거환경 개선을 통한 재활용 촉진 정책 시행 중
-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위한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사업 중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 따른 운영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 대책, 경남 교육청과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매뉴얼 개발 및 협업, 미세먼지 오염원 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오염저감 MOU 체결 및 관리, 경남형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총량제
  - 친환경차 보급확대, 전기 및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 경남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방안
  - 하수도 보급률 제고, 녹조 발생 주요인자 총인(T-P) 저감, 시설별 방류수질 강화 운영, 양분관리제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농업 비점오염 관리지역 신규 지정, 낙동강 지류총량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필요
  - 수소버스 도입 예산, 수소인프라 시군별 구체적 보급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 ■ 전략 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경남콘텐츠 진흥원 설립 추진,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검토 용역,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추진,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조성 중,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 용역 중
  -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업 및 지역예술인 참여 체계 구축 필요
  - 민관학 협력체제로 관광마케팅전담기관 및 경남콘텐츠진흥원 조기 설립 필요
  -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사업, 관광사업, 도시재생사업 정책 상호 연계
  - '가야사특별법'제정 촉구 위한 지역관심 제고 및 여론 조성

### ■ 전략 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 경남 도시재생센터 출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사업, 범죄환경예방 도시조성 사업,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관련 조례 추진 중
- 광역교통체계 확충 위한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준비, 지역 기관간 업무협약 추진 중
-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개통, 저상버스, 방재 시스템 강화 사업 계획대로 추진 중

- 공공건축가제도 및 공공건축재생 시범사업 필요
- 도시 재생분야 타 분야(문화예술, 관광) 연계 및 전문가 코디, 주민 협치 추진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유치 자문 연구단 구성
- 대규모 단지 조성 시 공원 총량제, 20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방, 경남 디자인센터 + 국립 남부 도시건축센터,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개설, 다양한 범죄예방 디자인
- 광역교통망 구축 촉진, 산청-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 창원-함안-김해 교통망

## ■ [중점과제 6] 저출산 총력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정, 공공의료정책담당 신설, 서부경남 혁신병원 공공병원 설치 용역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월 공모 예정으로 기초 지자체 및 넥슨재단과 협의 중,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조성 관련 용역 중으로 추진단 구성 예정
  - 서부경남 혁신병원 입지 선정 문제에 합리적 접근 필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부지 확보 및 예산 증액 필요, 장애 아동 학부모 단체 의견 수렴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필요, 읍면동 건강위원회 구성 필요

## 5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사회혁신 분야의 도정 계획은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
- 국가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영역이 다수로 그 실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개폐청구 요건 완화[국가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
  - 국민소송제도의 도입[국민소송법 제정]
- 제도의 도입을 위한 일부 과제의 연구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 예산 투입액은 적지만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나 시행은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대 도민대 국민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민관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실질적 활성화

## 6 46개 과제의 추진상황

- 준비 단계 (19개 과제): 과제 3, 과제 4, 과제 14, 과제 15, 과제 16, 과제 18, 과제 19(무상급식 확대는 성과실현단계), 과제 20 (추진체계는 착수단계), 과제 23, 과제 25, 과제 30, 과제 34, 과제 35, 과제 36, 과제 37, 과제 38, 과제 43, 과제 44(혁신과제

는 착수, 서부청사는 정착), 과제 45,

- 착수 단계 (23과제): 과제 2, 과제 5, 과제 6, 과제 7(창업사관학교, 창업투자회사, 스타트업캠퍼스는 준비단계), 과제 8 (이모작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는 준비단계), 과제 10 (소상공인 사랑 상품권,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는 준비단계), 과제 11, 과제 12, 과제 13, 과제 17, 과제 21 (위원회, 원스톱 보육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긴급육아도우미, 긴급가사도우미는 준비단계, 어린이집 청정기는 정착단계), 과제 22 (서부경남병원, 통합의료벨트는 준비단계), 과제 24, 과제 26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는 준비단계), 과제 27, 과제 28, 과제 29, 과제 32(힐링관광과 남해안도보여행길은 준비단계), 과제 33, 과제 39, 과제 41, 과제 42, 과제 46
- 성과실현 단계 (4개 과제): 과제 1 (고용실천전략은 준비단계), 과제 9, 과제 12, 과제 31 (창원야구장은 정착)
- 정착 단계 (0개 과제)

## 7 12개 전략과 6개 중점과제의 추진상황

- 준비 단계: 1-4 농어촌 전략, 2-1 의료와 복지, 2-2 포용사회, 2-4 문화, 2-5 공간, 3-1 참여민주주의, 3-3 행정혁신, 중점 2 사회적 가치실현, 중점 3 서부경남 KTX, 중점 4 R&D 체계 혁신, 중점 5 먹거리 순환체계, 중점 6 저출산 공공의료
- 착수 단계: 1-1 신경제지도 전략, 1-2 일자리 전략, 1-3 민생경제, 2-3 자연과 공존, 3-2 협치, 중점 1 제조업르네상스,
- 성과실현 단계
- 정착 단계

## 8 추진 체계 점검

- 전담 및 협력 부서 운영: 배정 완료. 점검 취합이 지연되고 있음.
- 분야별 과제 총괄 책임기관: 준비중, 2019년에는 착수되기를 기대.
- 도정 자문위: 착수, 위상과 내부적 운영 체계화가 필요한 상황.
- 과제 추진성과와 성과평가의 연계: 미비.

## 9 기본 체계

- 재정 투자: 국비보조는 순로롭게 출발.
- 조직: 2018년도 말 조직개편으로 착수하였다고 평가,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의 문제를 제기.
- 조례: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를 완료, 위원회 발족은 일차년도에 잠정적 운영위 필요성을 판단하여 발족하기로.



제1부

## 총괄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2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이행상황의 점검





## 제1부 총괄

### 1) 도정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동향

#### ■ 정치적 동향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를 통한 신임 도지사의 취임
  - 1년 3개월 동안의 도지사 공백상태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도정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임 도지사가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운영의 계기가 마련됨. 지역정치의 특색으로 보수정당 출신이 도정의 책임자로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진보적인 성격의 더불어민주당을 배경으로 한 도지사가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에서 경남의 유권자 투표율은 65.8%로 전남(69.3%), 제주(65.9%)에 이어 높은 투표율을 보여, 경남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것임. 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후보는 총투표자의 52.8%를 득표하여 당선됨. 이것은 한국의 지방정치 지형을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함
- 도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분포변화
  - 경상남도의 역대 도의회 의석분포는 보수정당(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절대우위를 차지하여왔음. 그러나 제7대 동시지방선거(2018.6.13.)에서 도의원 선거경우, 더불어민주당 34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의 결과를 보여 도의원들의 정당분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남
  - 경남의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7명이 당선되어 경남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배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 이와 같은 도의회의 의석분포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배경의 변화는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안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김경수 도지사에게 대한 도정수행능력평가
  - 도지사에게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변화를 지향하면서도 안정적인 도정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김경수 도지사는 한국갤럽이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정수행능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일명 '드루킹'사건으로 정치적인 입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의 평가는 긍정 49%, 부정 22%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전임지사의 경우 30%대의 긍정과, 50%

대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경남도민의 신임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통령에 지지도 변화와 도정

-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의 자생적인 역량과 성장동력의 강화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국정수행의 동력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경남도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측면임
- 서부경남KTX의 조기착공,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와 조선산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경남지역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은 우려되는 요소임. 대통령의 지지도에 의해 도정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역으로 도정의 운영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도정이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 경제적 동향

- 전반적 경기상황

- 2018년도 세계경제는 3.7%의 성장을 보였고 중국6.2%, 미국 2.9%, 일본 1.1%의 성장률을 기록함. 2019년도의 경우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18년 수준인 3.7%를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주요국인 중국, 미국,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의 2019년 경제성장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2.6-2.7%의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투자활성화, 복지지출의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전국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이후 전국평균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됨(경남의 산업기반인 기계, 조선, 자동차부품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서비스생산과 노동생산성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2018년과 같은 2.6-2.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동남권 주력업종의 성장세 회복으로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된 동남권의 경제성장률이 1.7%로 예상됨, 2016년부터 지속되던 0%대의 성장률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전국 경제성장률에 밀도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경남지역 주력산업의 현황

- 경남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제조업 주력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메카지역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조선산업의 급격한 위축과 더불어 기계,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2018년 분기별로 실시한 경기전망지수(BSI)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됨. 제2분기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전망지수는 3분기와 4분기에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산업의 쇠퇴와 직결되기 때문임
- 그러나 수년간 수주절벽으로 쇠락을 길을 치닫고 있던 조선산업에 최근 활발한 수주가 이루어져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향후 조선산업의 경기회복으로 지역경제의 활로가 기대되는 상황임. 본격적인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 나기까지의 시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19년 6월까지 연장한 조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업계 상생 협약에 대한 지원이 향후 조선업 활로를 여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선산업은 2019년에는 6년 만에 플러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고용 및 일자리 현황

- 경남지역의 경우 주력 제조업의 성장세 부진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즉,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2015년 70.4%, 2016년 68.2%, 2017년 67.3%) 있는 반면에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2015년 29.6%, 2016년 31.8%, 2017년 32.7%) 추세를 보임
- 특히 경남의 청년 고용률은 30% 후반의 낮은 수준으로(2017년 전국 13위), 전국평균과의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전반적인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청년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여 40%에 진입함
- 고용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최근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1-2년 이내 지역의 고용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9.8%의 응답자가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응답하여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 지역주민 동향

#### ● 김경수 도정에 대한 기대

- 2018년 6월 13일 치루어진 제7대 지방동시선거에서 경남의 유권자들은 65.8%의 높은 투표율(전국 광역자치단체가운데 3번째)과 도지사 선거에서는 52.8%의 지지율을 보여 새로운 도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드루킹 사건 등 부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임이후 도지사 직무수행능력에서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 2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도정수행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7월 2일 취임이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의 도지사에 바라는 의견표출이 460

건으로 도정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사항에 대한 경남도민의 인식도(2018년)

- 리얼미터가 2018년 12월에 실시한 전국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주민생활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51.8%의 응답자가 만족을, 43.6%의 응답자가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전국 평균(만족 53.0%, 불만족 41.1%)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주민들은 경남지역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62.0%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거주할 의사에 대해서도 78.6%가 긍정적인 응답을,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살기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를 보여 지역에 대한 일체감 내지는 자긍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경남도민의 18.6%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1%로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안전하다고 응답한 전국의 평균 20.5%에 비추어 경남도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최근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경남도민의 79.4%가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음. 전국 평균은 82.5%에 비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경남도민의 57.5%가 만족하다는 응답을 2.4%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조사대상의 56.6%가 만족, 5.5%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전국평균(만족 58%, 불만족 4.6%)에는 약간 못미치고 있음
- 녹지환경 만족도의 경우, 녹지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2%인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면, 경남도민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회복지분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8%가 '출산·보육지원'을, 26.3%가 '노인복지사업 확대'라고 응답함으로써 최근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 도정과제의 추진경과 및 이행상황의 점검

### 도정 4개년 계획의 확정과 추진경과

#### ● 도정 4개년계획의 확정

- 2018년 6월 21일 도정 인수 작업과 도정 4개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함.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40여일 간의 활동을 통해 도정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신임 도지사에게 제출. 이후 「도정4개년계획」을 8월 16일 도민보고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널리 열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함
- 도정 4개년계획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삼고,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을 운영원리로 하고 있음. 이러한 비전과 운영원리하에 ‘다시 뛰는 경남경제’, ‘사람중심 경남복지’, ‘함께여는 혁신도장’을 3대 목표로 설정함
-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전략과 46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46개의 과제 가운데, 도지사가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6개의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함

#### ● 도정4개년계획의 1차년도 추진경과(2018.9~12)

- 2018년 8월 16일 도민보고대회를 통해 확정된 「도정4개년계획」은 9월부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실국별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감. 먼저 46개 과제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정하고 이들 전담부서들로 하여금 협력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각각 식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총 140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됨
- 140개의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목표-전략-과제-세부과제의 순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함. 예컨대,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이라는 세부과제는 1(목표1: 다시뛰는 경남경제)의 전략1(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 가운데 과제 1(경제혁신재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의 세부과제 ①(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의 번호체계 하에 1-1-1-①의 고유번호가 부여됨
- 이들 140개의 세부과제를 각 전담부서에서는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제추진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성, 과제목표, 추진개요, 연차별이행계획, 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함.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전담부서에 작성한 세부과제 기술서를 취합하여 「도정4개년계획 이행계획」이라는 책자로 발간함(2018년 10월)
-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140개의 세부과제는 각 실무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로 설정되어 본격적인 실행과정에 들어감. 실행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일선 이해관계자 나아가서는 일반도민들과 소통과 참여임. 9월 이후 준비와 실행과정에 들어간 140개의 세부과제들은 12월까지의 짧은 기간동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12월까지의 추진상황을 각 전담부

서별로 확인하여 기획조정실에서 「도정 4개년계획 추진상황」을 발간함(2018년 12월)

## 이행상황의 점검

### ●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준비

- 도정 4개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침체된 경남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계획의 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의 결과를 향후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신임도지사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발전적인 정보의 환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강조하여 왔음
- 제3자적인 관점에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5일 30명의 자문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도정과제의 점검과 환류에 역할의 중점을 둔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킴
-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과제의 주기적인 점검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운영위원회, 기획분과, 경제혁신분과, 민생분과, 문화복지분과, 사회혁신분과로 구성하여 도정과제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감. 2018년 11월 30일 운영위 1차회의, 12월 19일과 20일 2차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도정과제 점검과 관련한 논의를 모은 후, 2019년 1월 5일까지 1차년도(2018년) 과제추진상황의 점검작업을 수행함. 2019년 1월 8일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윤독하고, 통합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음

### ● 이행상황의 총괄점검

- 각 분과에서 점검된 사항을 2019년 1월 9일 운영위원회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설명. 중간보고 이후 각 분과별로 다시 보완된 내용을 종합하여 2019년 1월 15일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최종보고회를 가짐
- 140개 개별 과제 가운데 1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감. 그리고 일부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됨. 140개 과제 가운데 정상추진 되지 못하고 검토중에 있는 과제는 1-1-2-2(과제고유번호)인 G-MBP개발 과제임
- 특기할 만한 것은 도정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과제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촉구 캠페인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조기착공의 실현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돌입함
- 기구의 설치,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도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기반적인 성격의 과제로 그동안 속도감있게 추진되어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과제의 추진으로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숙성시간과 순차적인 추진이 필요.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여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기 까지 지속적인 추진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동향과 관련 단체,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을 충분히 반

영하여 과제의 추진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관련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과 경청의 숙의적인 과정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2018년도 과제추진상황의 점검은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2019년부터는 과제별 추진 상황의 정도와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여 모든 과제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2부

목표 및 전략별  
도정과제의 점검

- 1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제2부 목표 및 전략별 도정과제의 점검

### ① 다시 뛰는 경남 경제

#### 전략1: 경남신경제 지도의 체계적 이행

##### 경제혁신분야 과제별 점검

- 점검대상 과제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의 3대 목표(“다시뛰는 경남경제”) 중 전략 1(경남 신경제지도의 체계적 이행)에 속한 6개 과제
  - 총 6개의 중점과제 중 3개 중점과제(1.경제혁신자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3. 서부경남KTX 신성장경제권 구축, 4. R&D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경과: 자문위 출범 이후 3회의 분과 오프라인 회의 및 단독방을 통하여 의견 수렴
- 점검 방법: 각각의 과제에 대해 도지사의 공약과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추진 및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점검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새로 하는 방식

##### 과제 1

#### 경제혁신 자원 1조원 조성 및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 점검의 기본방향 : 중앙정부의 펀딩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도지사 부지사 등 개별적 차원 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

#####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I-1-1-①)

- 추진 현황
  - 2019년 국비로 확보한 최종 확보 금액은 5조 410억원(도지사 신년브리프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서 6천억원 이상이 증액된 2019년도 국고 보조가 통과되었으며, 이 중 도지사의 정치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도 2천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
  - 중앙부처: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국비확보 4단계 전략을 구사(중앙부

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 국비 확보에 총력)

- 정치권 : 도지사 당선 이후(9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의회,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국비 확보(11월 5일에는 국회 여야가 참석한 예산협의회)
  - 국회예산심의 과정 :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적 공조체계를 통해 예산 확보(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 신규 확보, 함양~울산 국도건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등 추가 확보)
  - 2019년 신규사업 예산 확보: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 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재는 도지사 & 부지사 &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
    - 따라서 도 차원의 마스터 플랜 등 계획수립과 대응 조직 필요, 펀딩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추진 조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경제혁신추진위원회(I-1-1-②)

- 현황

- 경제혁신을 추진할 주체로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산업고도와, 혁신성장, 사업지원분과 등이 설치됨으로써 추진체계가 갖추어지고, 월 1회 회의 등을 통하여 경남경제의 혁신을 위한 어젠더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기능으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평가·성과관리를 설정, 각각의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산업고도화', '혁신성장', '사업지원' 분과를 두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평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이를 각 분과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별도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진단(문제점)

- 위원회의 구성(현재 위원들을 주로 사업지원분과인 민간기업체 대표들은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내고, 도에서 투자 등 동의를 얻기 위한 조직인 것처럼 인식됨.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이를 평가하는 기능을 분과위에서 담당하는데, 분과위의 구성상 도의 정책방향(분과위원 일부, 특히 전문위원의 경우, '경남형'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건대) 자료의 생산은 경상남도에서, 그래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는) 정책 방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도에서 하

겠다고 하거나 혹은 담당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도의 정책방향과 다른 정책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자문이 아니고 심의기구이고 적절한 규모로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기구 역할이 원지. 너무 많은 사람. 거의 소모적인 회의....”

- 종합적 혹은 각 분과의 내용과 기능,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 경제부지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음. 분과장 혹은 분과위원들이 뚜렷한 정책방향을 가진 제안을 하고 이를 실행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

“도지사님이랑 부지사님 경제혁신추진위원장님 개인 플레이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안 하고 오로지 예산 쓰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 경제혁신추진위원회(2차회의)에 제시된 3개 분과별 과제는 매우 추상적임. 따라서 그 이후 어떤 과제들이 제안되고,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각 분과 자체적으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 의견

- 추진위가 실질적인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정책검토, 제안, 정책 반영, 모니터링)
- 경제부지사 역할이 펀딩에서 경제혁신추진의 중심축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 분과활동강화를 통해 회의자료의 생산(기획), 제안된 자료의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 ■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 수립(I-1-1-③)

- 진단(문제점)

- 2019년 12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일자리본부가 가동중. 이는 공약에서 제시한 일자리종합대책수립 실무 TF 구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에서 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 추진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진단

- 자문위 의견

- 과제목표로 제시된 ‘경남형 일자리 모델’의 정립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조업 혁신전략의 하나로서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산단화 정책들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경우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음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남의 고용실천 전략 수립(민선 7기 일자리 종합대책, 정부의 일자리공시제 연계) 상의 고용율 목표 등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물론 생산가능인구를 반영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고용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취업가능인구도 그만큼 줄기 때문에 고용율을 낮출 수도 있음. 따라서 일자리공시제에 반영된 고용율 목표가 과소(과대) 설정될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부속문건의 [참고자료]민선7기 도정 일자리종합대책 상의 고용율 추계 참조)

## 과제 2

# 제조업혁신과 신성장사업 확충

- 점검의 기본방향 : 제조업 혁신 관련 스마트화가 1)처음 공약대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2)일자리 창출(지역 내에서)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3)인력양성체계를 분절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스템스럽게 갖출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점검

[표1] 2019년 경남의 '산업경제분야'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4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LNG병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 ■ 핵심산업 고도화(I-1-2-①)

### ● 진단

- 경쟁력 약화의 주 요인인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제조업 르네상스와 항공우주, 나노융합, 로봇 등 신산업 창출로 새로운 먹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각 산업분야별로 2022년 6월까지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임
-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총 1조 1,495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 ● 자문위 의견

- 이 과제 안에는 국가산단, 대형R&D 프로젝트 등이 많고, 또 예비타당성검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므로 각 산업분야별로 이 과정을 기획하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실제 사업선정 시 프로젝트를 운영, 사업담당구조 등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기존 유사 사업들은 대부분 TP에서 주도)

## ■ G-MBP(I-1-2-②)

- 개념: 산업별로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관련 기업 및 공장의 스마트화(생산공정과 제조서비스까지 포함)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개념을 한 단계 진전시킨 개념

[표2]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과 경남제조혁신플랫폼 비교

구 분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	경남제조혁신플랫폼(G-MBP플랫폼)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체계 구축, 소품종 대량생산 시 불량률 저감)
보급서비스	MES, POP, SCM, ERP 등	Data Analytics, Predictive Service, CPPS
서비스대상	트랜잭션	Process
적용범위	단일기업	가치사슬 내 모든 기업
목표수준	기초 ⇔ 중간2	중간2 ⇔ 고도화
핵심기술	제어, 자동화, H/W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비유 유사성	전기밥솥 보급 일반 도자기 제작 기술	초밥 장인 육성, 고려청자 제작 기술

● 진단 :

- 현재 사업 구조는 스마트공장 구축하는데 모든 사업비를 소진해야 하는 구조임  
이행계획에 의하면 이 과제는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R&d 혁신 분야는 손도 안대고 있구요. 담당 과장이 금지어를 만들어서 g-mbp는 손도 못 댔구요. 내년도 국가 기획에 g-mbp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경남에서 제조업 이후에 대한 선진국형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여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 자문위 의견

- 경상남도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G-MBP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G-MBP에서 제안되었던 사업들이 각 단위 사업별로 쪼개져서 추진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차단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국형 산업인 제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통합 추진 필요 ⇒ 스마트 공장 보급 이후의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대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동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도입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

## 스마트 공장(I-1-2-③)

● 현황

- 양적인 확대에 치중된 면이 많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단순히 MES SW만을 공장에 설치하는 소위 “MES 보급사업”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음
    - \* 과거 ERP사업도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ERP 솔루션 공급기업간 과도한 공급 경쟁으로 인하여 부실 솔루션 제공, 솔루션 덤핑 같은 ERP솔루션 시장교란 부작용 발생
  - ② 현장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안 되는 기업들에게도 예산이 배정되는 비효율 발생

- ③ 공급기업의페이백, 기 구축 기업이 사업을 재신청하는 중복 지원 우려가 있음
- 일반형의 경우에는 경남의 제조기업의 현실, 그리고 방식(도에서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이 한다), 1개 당 1억원 정도의 지원금 규모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유형별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진단

- 22년까지 목표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경남 특화 스마트공장 모델 구축(유형 중에서 동반성장형이나 특화형)에 대한 고민, 대기업 설득 등 노력이 필요
- 이미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사업은 공장설비의 디지털+지능화(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위주임. 일하는 ‘사람’과 일터(작업환경과 방식) 혁신이 누락
- “민선7기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스마트일자리 확산’은 5대 핵심전략의 하나로서 ①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 ②스마트산업 육성, ③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④지능형 기계산업 지원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스마트 공장은 일자리와 연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 이 중에서 ‘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현상 극복 필요, 중소기업 스마트화로 청년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취지로 도내 중소 제조공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사정 3주체 상생 일자리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함
-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스마트산단 투자를 통해 주거, 문화 등 지원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은 경남형 일자리 모델로 홍보되었으나 아직 추진 초기단계라 그런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불분명
- 인력양성 교육은 스마트 공장 운영을 위한 직원(무) 교육은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도내 대학에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계획에 머물고 있음, 인력양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 12월에 인력양성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3차 회의 자료 9.17) 계획 작성여부가 불분명함
- 스마트 관련 TF, 민관협의회 등의 구성과 진척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이 협의체는 도 담당공무원들의 재량에 의존, 과거 민선 7기 이전 민관협의회의 시행착오 반복 우려)
- 금융상품 ‘경남스마트팩토리 론(Loan)’ 출시(‘19. 1월 시행, 5차 위원회 자료) 확인 필요

● 자문위 의견

- 사전진단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사전진단을 통과한 기업에게만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  
⇒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사전진단 전문가 확보 및 역량 강화 필요
- 대상기업 선정과정, 구축 이후 등에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 제조 형태별 우수 스마트공장 선정 또는 Reference Model(참조모델)을 정형화, 도입희망 기업에 전략적 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전략적 추진로드맵 수립, 성공사례 도출 등)



- 국비 및 도비지원을 통하여 구축된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편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 시스템 도입 후, 2~6개월 내 재조사를 통한 납품 단가 인하 ⇒ 결국,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국가 및 도비 예산의 우회적 편취
- 제조공정 개선 사업 및 관련 R&D 사업으로 사업 확대 필요 ⇒ MES, POP, ERP 보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ICT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Mobility, 5G)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의 조기 설립(과제 I-1-2-⑤)도 검토, 다만 설립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TP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으로 설립, 운영 필요
- 일자리와 연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선7기 일자리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바 있는 스마트 일자리 모델이 모델로서 실험되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학습과정이 필요
- '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의 관건은 단지 시설 설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확산이 아니라 이를 도입 구축 운영하는 노사정 3주체의 협력과 신뢰임
- 특히 스마트 일자리 모델 구축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소 제조공장 및 산업단지의 노사 협력과 신뢰를 형성하는 과제와 관련해 경남도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 스마트공장을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연계, 스마트공장 사업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키우는 '일터/작업자의 스마트화+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추가 정책 기획에 대한 검토 필요[참고자료 2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정책 사업] 참조)

## ■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I-1-2-④)

- 현황: 산단고도화를 통한 제조업혁신이 목표. 현재는 담론 수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19년 2개. 총10개 정도)
  - 정의: "데이터, 자원 연결 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일자리 창출)하는 산업단지" 로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넘어서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화"(출처: 산업부,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계획")
- 진단과 의견
  - 경남형 스마트산단전략계획 수립('18.11)의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철저 대비 필요
  -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스마트산업단지재생 시범사업추진체계 마련
  - 기존 산업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동시에 '인간화' 정책이 동시에 필요, 즉 국정철학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의 취지에 부합해야 함
  - 그런 관점에서 과제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에 산업단지의 '인간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

서 산업정책(산자부 관점)+도시계획(국토부/지자체)+문화예술체육(문체부)+지방정부(종합)의 관점을 통합한 ‘통합 추진단’이 필요

[표 3]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자료 중 스마트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 논의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자료(5차회의 , 일본연수 후 작성)
<p>○ 스마트 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기업 규모별·업종별·단지별 스마트화 가능 역량 진단</li> <li>• 도내 쇠퇴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li> <li>• 물류 최적화, 폐기물의 원자재 활용, 에너지 공유, 미세먼지 개선 대책 등 포함</li> </ul>
<p>※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기술인력 및 R&amp;D인력의 지역 유치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달리말해 이는 곧 ‘가장 중요한 산업공유자산인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므로,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에 반드시 필수적인 우수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유인에 필요한 주거와 교육, 문화와 레저 등 생활 분야에서의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의 ‘생활SOC 구축’ 관련 공공사업 역시 일종의 산업공유자산 구축 사업</li> </ul> <p>※ 산업단지 고도화(스마트 산단)의 보완을 위한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가 이미 추진해온 ‘산업공단 환경개선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에 의한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여, 산업단지 쪽으로 몰리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변질되는데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공단 환경개선 사업의 문제점 파악이 필요</li> </ul> </li> <li>○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들이 민간자본(부동산투기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 의해 그 본래 설립 취지가 변질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산업단지들의 경우, 제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부동산 민간자본의 산업단지 침투에 의해 저해당하는 사태가 빈발</li> <li>- 이 왜곡 현상을 막으려면, 산자부(국가산업단지) 또는 광역지자체(일반산업단지)의 역량/권한만으로 부족, 부동산 관련 규제 ‘노하우’를 가진 국토부 나서서 구체적 정책 내용을 기획하는 공동협력이 필요</li> </ul> </li> <li>○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민간자본(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자본)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의 재생에 공공의 적극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li> <li>- 또한 비수도권의 대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필지(대기업 입지)를 소규모 필지(벤처기업 입지)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지방정부 규제를 개선할 필요</li> </ul> </li> <li>○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병행·결합하여, ‘산업단지 재생’ 정책사업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기획하는데 한계</li> <li>- 산업단지 재생이 도시재생 사업과 긴밀하게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기획이 필요</li> </ul> </li> <li>○ 생활SOC 사업의 일환인 ‘청년 친화형 산업공단’의 이름으로, 산업공단에 문화예술, 스포츠·레저, 도서관, 직업교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SOC 인프라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만 아니라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공동협력을 통한 구체적 정책기획이 필요</li> <li>-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공동협력 필요,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에게 도시계획 관련 일부 규제권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li> </ul> </li> </ul>

## ■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I-1-2-⑤)

### ●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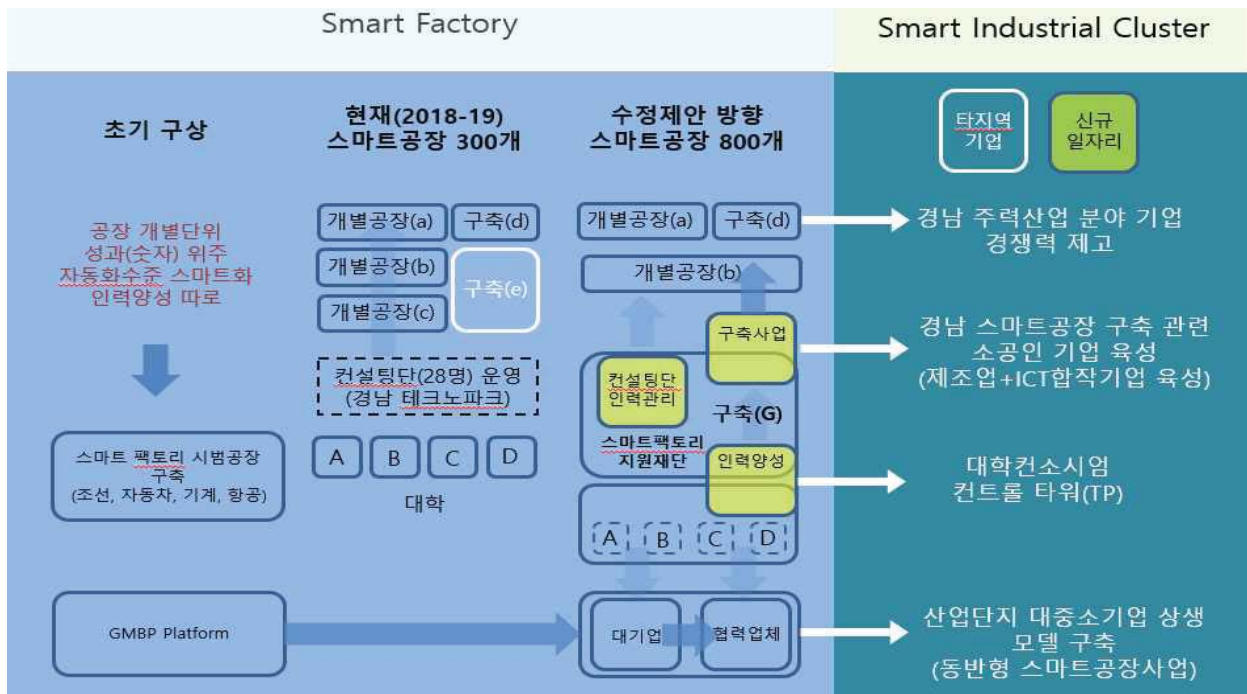
- 경제혁신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어젠다 개발 차원에서 발표, 검토되었던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 경남형 “i4.0제조업 혁신 센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
- 4개년 이행계획은 하드웨어보다 운영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중심형 인력양성교육을 함께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학의 역할이 약함
- 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4,400명(22년까지)양성이 목표로 제시되어있으나 청년일자리와 연계가 구체적이지 못함

- 스마트공장추진단 안에 경남스마트공장추진협의체가 있으나 가동여부 확인 결과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임. 이에 대한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불만이 많음
- 동 공약의 실제 내용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이므로, 동 정책 사업을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 공장’, ‘G-MBP사업’,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 의견

-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사업 명칭을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으로 개칭 검토
-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예를 들면 경남 제조업 스마트 시즌 2의 경우 국내 유턴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조사가 중요)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 혹은 기존 경남 TP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마트산업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
- 경남TP(혹은 신설조직)가 주도하여 각 대학 포함 인력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중복투자를 막고, 구축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턴트 활용, 운영인력 활용 일자리창출과 연계 필요
- 너무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의 개선, G-MBP,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업단 연계, 제조+ICT기업 육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앞의 과제들을 고려한 제안(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스마트공장구축, 스마트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 종합구상



- \* 2018.12.18.경남 TP방문 후 분과장과 유남현 교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 \* 스마트팩토리지원재단은 TP에 있는 스마트공장지원센터에서
- \* 구축사업을 통해서 경남의 소공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 \* 컨설팅단 인력관리는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중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동시에 별도로 대학 인력을 추가로 교육 등을 통해 확보해서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 G-MBP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R&D 체계 혁신과 광역연구플랫폼 구축

- 점검의 기본방향

- 과제 3은 총 7개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점검의 기본 방향을 “지역 R&D역량 강화”로 설정
-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

### ■ 광역연구플랫폼 구축(I-1-3-①에서 I-1-3-⑥까지)

- 진단과 의견

- 강소연구개발특구(I-1-3-①)의 경우 1개소 이상 지정 목표는 적절하다고 보이나 강소특구에 대한 개념 등을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권역별로 대학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R&D공동연구 플랫폼 구축(I-1-3-②)의 경우 동남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과의 공유 문제(특히 김해지역과 부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기업 R&D센터 유치(I-1-3-③)는 지역의 R&D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연구기관 분원 1-2개, 대기업R&D센터 1-2개소 유치 목표는 적절해 보임. 다만 이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논리, 부처간 협의 등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I-1-3-④)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경남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I-1-3-⑤)은 ICT산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지역 R&D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생각됨. 다만 스마트 공장 관련 정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제조혁신을 위한 다른 정책들과 연계하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 혹은 기존 조직(TP) 활용 등 신설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대표적으로 TP) 반영의 장단점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음

###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설립(I-1-3-⑦)

- 진단

- 중소기업의 R&D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아이টে을 사업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 향상 및 과제기획 역량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체계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R&D사업화 지원 1년 20건 목표 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테크노파크에 1층에 센터가 설립(2018.10.26.)되어 운영중임

- 자문위 의견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공약 등) 등과 연계가 중요하므로 도의 여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 국비 건의 및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R&D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 지역 R&D역량 강화(경남형 R&D체계 구축)

- 현황: 전체 목표는 “경남형 R&D체계구축”으로서 이에 속한 과제 1-3(R&D핵심역량 확충,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R&D주체간 협력강화)은 공약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
- 경남 R&D체계의 문제점(경제혁신추진위 혁신성장분과 전문위원 김태화 교수 지적)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하여 단순 매칭만을 수행, 투자의 전략성 부족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이 없으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등 중앙정부 조직·사업에 의존
  - 경남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법적기반 부족
- 경남R&D체계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계획에 대한 진단
  - 체계구축이 지역이 지역R&D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 모습이 구체적이지 않음(아직은 관성적임)
  - 과제 3의 경우 협력 분야로서 조선, 기계, 에너지 분야 등
  - 경부울(동남권) 대형 국책 R&D사업 발굴 및 수행 같은 방식이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4번째 과제인 “국가 R&D혁신방안 연계한 지역주도형 R&D 혁신역량 강화”임.
  - 프로세스를 보면 ①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②경쟁 방식(공모)로 선정되면 ③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누가(어디에서)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②경쟁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기획단계에서 이러한 플랜(내용과 참여주체들의 결정, 결과의 모니터링, 사업화 계획) 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 또 다른 문제는 그 방안으로 “지역거점대학 특화분야 R&D지원강화”: 거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대학에 △△센터를 만들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 제안

- 경남R&D특구에 대한 의견(경제혁신추진위원 박민원 교수): “인간중심적 경남R&D특구”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경제혁신추진단(혁신성장 분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
-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지역의 R&D사업 평가조직까지 포함하는)

#### 과제 4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점검의 기본방향

- 정밀기계, 스마트부품, 신선 화물, 바이오화물 등 고부가가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물류클러스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 제안 시 동 과제의 의의를 잘 반영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점검
-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제안:

- 이 과제는 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경남광역교통망 구축 등과 연계되어 있던 것으로서 향후 플랫폼 구성을 통해 경남을 동북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신항 경남지구의 스마트화와 연계하여 추진
- 경남도정이 소홀해 왔던 항만 물류에 대한 주도적인 능력 배양, 전문성 함양에 의의가 큼. 따라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청내의 관성, 중앙정부의 지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청의 적극적인 의지로 수행하기를 바람

#### 과제 5

###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 점검의 기본방향 : 추진체계나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도민(해당지역민)들의 의견, 그리고 민생분과 등과 협조하여 기대효과, 도정 4개년 계획(혁신도시 시즌 2 등)과 연계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

- 현황: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 예정

#### 경남도정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 서부경남KTX 착공과 관련하여 도민의견 적극 제시, 기대효과외의 경우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 동시 제시, 기대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
- 서부경남혁신클러스터의 경우 현 진주시장이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에 대한 추진 압력 및 진행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특&균형발전&혁신경제발전위원회 의견 청취 필요

- 관련 예산: 2019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 80억 반영
- 제안: 예타 면제 등을 통한 SOC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고 동 사업의 효과, 지역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하는 연구 필요(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 과제 6

# 서부경남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 점검의 기본방향
  - 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경상남도와 관련 지자체(진주)간 협력, 혁신도시 조성계획, 경상남도균형발전위원회(지특사업 등과 연계 혹은 지자체간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집중화 등),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 항공 ICT융복합클러스터 조성(I-1-6-②), 희유금속 소재 부품(I-1-6-③), 세라믹 소재 부품(I-1-6-④), 지역전략 항노화 산업 육성(I-1-6-⑤)등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혁신도시 시즌 2(I-1-6-①)

- 진단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도정자문위원회가 두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 결과와 자료 공유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2018.10)되고,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가 진행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가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음. 용역결과 복합혁신센터 및 복합문화 도서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부처(국토부 등) 협의로 추가사업 추진 필요
  - 우주산업의 경우 최근 중형위성조립공장 유치를 두고 진주시와 사천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두 자치단체간의 대립 갈등을 조정 및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부경남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각각의 미래먹거리산업 별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조정 및 지원을 원활하게 주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안
  - 서부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은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미래 전략산업임(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관련 위원회 활동 및 혁신도시 시즌2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도지

사와 지자체 단체장 간 정례 정책협의회, 행정혁신과제와 협의 등)하고, 관련 지원책(예산)을 통해 지자체간 조정 등을 도가 주도할 필요

- 항공산업의 경우 중형위성조립공장 관련하여 진주와 사천간, KAI와 고성간 항공기 날개 생산공장 투자 협약(12.26)과 관련하여 사천과 고성간 갈등 유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경상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려(지자체선거 뒤 항공벨트조성논의)

### ■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I-1-6-③)

#### ● 진단

-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는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 향후 남북경제협력 대비, 호남 동부권과 협력을 통한 경제권 확장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현재까지 관련 전문가 자문, 산업육성 기반조성 용역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거쳐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 ● 제안

- 지역 내 희유금속 자원 조사 및 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세라믹소재부품을 경남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공약(I-1-6-④)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전남 동부권과 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경상남도의 로드맵 작성 필요
- 희유금속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실국간 협력, 중앙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북한지역의 자원조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현재 다양한 방식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전략2: 도민에게 희망주는 좋은 일자리

### 과제 7

## 청년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현황

- 6가지 사업 모두 '정상추진'중
- ①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확대 및 채용비리 예방(공약)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은 '18년 3%에서 '19년 말 5% 확대 당초 목표를 훨씬 능가하는 12% 실적 성취하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18.12.) 완료
- 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6개 사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9개 사업, 민간취업연계형 4개 사업 등 23개 사업, 159억원(국 73, 도 40, 시군 41, 기타 5) 투자해, 총 974명의 청년 지원(직접 일자리 362명, 창업지원 108명, 전문교육 70명, 일경험 434명)
  - 경남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은 대졸청년 채용지원 기업트랙과 고졸청년 채용지원 하이트랙 운영을 통해 68개 기업 252명 채용
  - 청년일자리플랫폼 등 4개소 공간조성
- ③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공약)
  - 경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율을 '18년 29.8%에서 '21년 8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는 목표(공약)에 대해 연차별 이행 계획은 22년 6월 민선7기 말까지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 추진실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네트워크 구축,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 및 운영실태 벤치마킹,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도내 고교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도내 '청소년 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추진 업무 협의를 함
- ④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공약)
- ⑤ 경남기반창업투자회사 설립(공약)
- ⑥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공약)

### 제언

- ②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및 기업맞춤형 일자리 추진:
  - 경기 부진에 따른 협약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로 협약청년 미채용 문제 발생에 대해 채용실적이 없는 기업은 자동 협약해지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리일뿐. 그런 처지에 처한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현황파악, 원인분석 등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 ③ 청소년 근로조건 지키미 (공약)
  - 인력풀로 도내 지청별 2명, 경남 8명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한다고 하나, 이 규모의 인력과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 성과의 내실(양질의 근로조건 지키미 활동과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과제 추진 시늉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임

## 과제 8

###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현황

- 과제 8(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대상은 크게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소상공인, 노인임. 대상집단별로 지원서비스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확충 계획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① (경력단절여성) 현재 도내 9개소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2년까지 1개소 추가 지정 추진 계획;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새일여성인턴 종료후 상용직 채용 3개월 고용유지 인센티브(취업장려금 추가지급) 확대 계획 추진중
- ②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개소 신설,
- ③ (신중년) 일자리더하기 장려금으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인 기업에 도가 고용부 지원금의 50%를 1년 연장하여 추가 지원 ('19년도 예산 신청중);
- ④ (소상공인) 경남창원지원학교 유치
  -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사업 확대 ('18년 청년 130명, 중년 20명(시범) 운영, '19년 청년 150명, 중년 100명(확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경남 유치
- ⑤ (노인)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를 '18년 29,711명에서 '22년 50,179명으로 그리고 수당을 '18년 월 27만원에서 '22년 월 4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시니어인턴십: '18년 90에서 '22년 210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시니어클럽 '18.9월 9개소에서 '22년까지 17개소로 연차적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18년 5개소에서 '20년 6개소로 (증설 1개소)

## 제언

-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국비 고용장려금에 추가로 도비를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고용촉진효과에 대한 도 차원의 점검 평가가 요청됨
-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노인 등 대상집단별로 지원서비스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상집단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역 지방정부로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이를테면, 신중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기관 선정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또하나의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체보다 신중년층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전국 최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운영(2013.2.4.)한 서울시의 경험을 참고하면,
  -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 수립(2014.4.14.)
  - 50+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연구 완료(2015.04.)
  - 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5.04.02.)
  - 추진기반
    - 50+재단: 50+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컨트롤타워
    - 50+캠퍼스: 권역별 허브
    - 50+센터: 지역기반 플랫폼(구별 1)

## 과제 9

###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현황

-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 공모에 발맞추어 경남이 선정되었음

## 제언

- 사회서비스원(공단)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대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일자리 안정성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위해 추진된 것이니
- 경남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추어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임

## 제안 1 일자리 목표

### 현황

- 민선7기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 (v11 최종 reis 공시, 이하 ‘종합대책’)의 일자리 목표는 다음 [표4]과 같음

[표4] 민선7기 경상남도 일자리 목표 (2019~2022)

(단위 : %, %p, 천명)

구 분	'17년	'18년 (예상치)	목표				'18년 대비 증감(률)
			'19년	'20년	'21년	'22년	
고 용 률	66.4	66.6	66.9	67.2	67.5	67.8	1.2
청년고용률	39.0	40.2	40.2	41.6	42.4	43.2	3.0
여성고용률	55.5	56.1	56.6	57.0	57.5	57.9	1.8
취업자 수(15세-64세)	1,559	1,579	1,593	1,608	1,622	1,637	3.6
상용근로자 수	832	854	863	873	882	892	4.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735	760	769	778	788	797	4.8

※ 고용률은 15세~64세 기준임(청년고용률은 15세~29세)

※ '18년 예상치 및 '19~'22년 목표치는 최근 5년간 데이터('13~'17년) 시계열 분석 결과임.

출처: 경상남도. 2018. 『민선7기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v11 최종 reis 공시), p.20.

- ‘종합대책’ 목표 설정의 주요 특징을 보면,
- 고용률(15~64세)을 '18년 66.6%에서 '22년 67.8%로 고용률의 양적 지표를 1.2%p↑ 제고하되, 동시에 청년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을 각각 3.0%p↑, 1.8%p↑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청년고용률 향상과 여성 고용률 향상이라는 정책 대상별 중점 전략을 표명함

- 또한 민선7기 동안 취업자 수(15~64세)를 3.6%↑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되, 상용근로자 수를 4.4%↑,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4.8%↑ 증가시키어 일자리의 질 개선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목표 설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제언

-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고려 미흡
  - 경남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도정 계획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종합대책'에서는 그렇다고 하기 어려움
  - '종합대책'의 고용률(15~64세) 목표 설정은  $\text{고용률} = \text{취업자수} / \text{생산가능인구}$  라는 고용률 정의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8년 2,370.9천명에서 '22년 2,414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청의 경남 장래추계인구(15~64세)는 '18년 2,402.1천명에서 '22년 2,344.9천명으로 -2.38%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 15~64세 생산가능인구중 군입대자나 교도소 재소자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숙박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통계청의 15~64세 장래추계인구와 같은 성장률로 증감한다고 가정하면, 경남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8년 2,343.7천명에서 '22년 2,286천명으로 -2.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표 12] 및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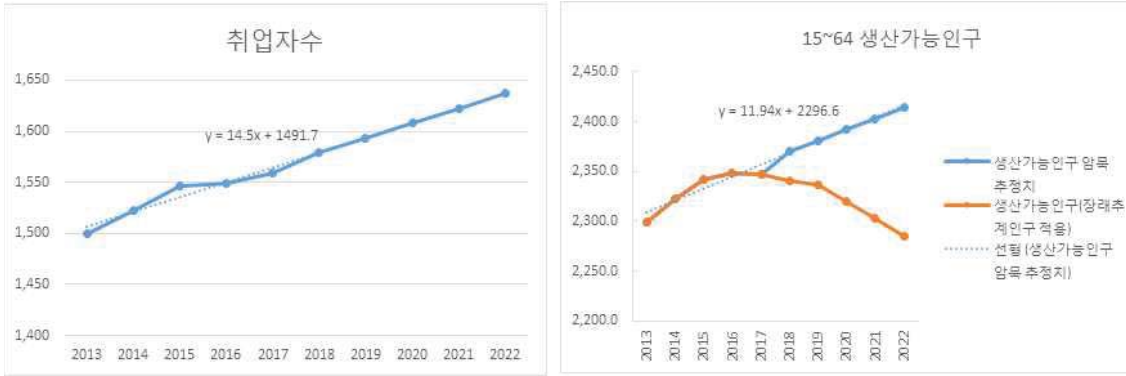
[표5] 경남 15~64세 장래인구추계와 생산가능인구 (2017~2022)

(단위: 천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8년대비 증감률
종합대책상 생산가능인구 추정치	2,347.0	<b>2,370.9</b> (1.02)	2,381.2 (0.43)	2,392.9 (0.49)	2,403.0 (0.42)	<b>2,414.5</b> (0.48)	1.8
생산가능인구 (경찰조사)	2,346.9	<b>2,340.7</b> (-0.14)	2,336.6 (-0.19)	2,320.0 (-0.71)	2,303.3 (-0.72)	2,285.3 (-0.78)	-2.4
장래추계인구	2,405.4	<b>2,402.1</b> (-0.14)	2,397.5 (-0.19)	2,380.5 (-0.71)	2,363.5 (-0.72)	<b>2,344.9</b> (-0.78)	-2.4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 고려하면 고용률 목표 상향 설정 요
  - 만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을 <표 6>에서와 같이 수정한다면, '종합대책'의 취업자 수(15~64세)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민선7기 고용률(15~64세) 목표는 '22년 당초 57.9%가 아니라 71.6%로 상향 설정이 요망됨
  -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님



[그림 8] 종합대책의 취업자수와 고용률 목표에 함축된 15~64세 생산가능인구 및 장래추계인구 적용한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취업자 수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강구했는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요구됨
- 당장 통계청이 2019.1.9.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 '18년 경남 생산가능인구 2,340.7천명 (종합대책의 암묵치 2,370.9천명에서 -30.2천명 하회)
  - '18년 경남 취업자수 1,566천명 (종합대책의 예상치 1,579천명에서 -13천명 하회)

[표6] 민선7기 경남 생산가능인구 추계 수정 시 고용률 목표 (15~64세 기준, 2019~2022)

구 분		'17년	'18년 (실측치)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대비 증감(률)
비 고	고용률(15~64)	66.4	<b>66.9</b>	67.8	68.9	69.9	71.0	4.1
	취업자수(15~64)	1,559	<b>1,566</b>	1,585	1,597	1,610	1,623	3.6
	생산가능인구(15~64)	2,346.9	<b>2,340.7</b>	2,336.6	2,320.0	2,303.3	2,285.3	-2.4

- 만일 일자리 대책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취업자 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요청됨

[표 6]의 2019~2022 취업자 수는 종합대책의 취업자수 목표 설정 방법에서 2018년 취업자 수를 통계청의 경찰조사 실측치로 수정하고, 이후 2019~2022년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의 추세식을 연장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그대로 제시한 것일뿐이고,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님.

- 민선7기 기간중 일자리종합대책으로 기대되는 각년도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소멸되는 일자리 수를 고려한 보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자 수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고용률 목표도 여성 생산가능인구 추정과 취업자수 목표로 나누어 고용률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권고함

## 제안 2 조선업 일자리를 위한 RG 발급 제도 개선

### 배경 (현황과 문제점)

- 소형 및 중형 조선산업은 전 세계 신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조선 시황 이 회복되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임. 또 중소형 선박은 많은 척수로 인해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음
- 한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소형 및 중형 조선소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조선에 대한 RG발급이 까다로워져 중소조선의 선박수주가 어려워짐. RG 발급이 지연되면서 선박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업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
- 은행의 입장에서 RG의 발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RG에 인해 비롯되는 제작금융의 지원 등 지속적인 금융부담의 유발. 건조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에 있음
- 이에 건조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정부산하 건조프로젝트 컨트롤타워를 구축, 컨트롤타워에서 RG 요청에 따른 제반 사항- 원가분석. 리스크 분석 등 - 검토 후 정부가 은행을 통해 RG 발급을 유도

### 정책 방향 및 목표

- 정부 산하 건조프로젝트 심사위원회/컨트롤 타워설치
- 건조 프로젝트의 심사기준을 정해, 심사위원회에서 건조 프로젝트 심사, 경쟁력을 갖춘 중소조선소의 경우 적기에 RG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객관적인 제 3자로 컨트롤타워의 구성: 학회대표 2인, 중형 및 소형 퇴직경영, 시장, 영업 전문가 3인, 금융권 2인, 정부 2인, 지자체 2인(RG기금을 부담하는 경우)
  - 설치: 2019년 중
  - 기능: 건조프로젝트 감정, 전문가 의견 제출, 건조프로젝트 상담
  - 규정과 운영: 건조프로젝트 심사위원회/컨트롤타워 준비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통해 결정
- 글로벌 조선 수요의 예측 및 대안 제시 : 영국 Clarkson과 협력 및 빅데이터 활용

## ■ 기대 효과

- 건조 프로젝트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건조프로젝트의 수행 촉진
- 일자리 창출 (약 5만명)
- 대중소조선의 균형발전
- 수출 예상액 년 50-60억\$



## 전략3: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 경제

### 과제 10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지원

#### 제로페이 도입(I-3-10-①)

####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I-3-10-②)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카드사용자(소비자)들이 과연 제로페이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될까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수년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공시설 할인, 포인트 지원, 경남사랑 모바일 상품권 연계 등의 기존 인센티브(카드 사용자 대상 혜택)만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 제로페이 및 사랑상품권 정책의 수혜자가 소상공인들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할 필요
  - 가령 동일 지역에 위치한 '이업종' 소상공인들이 서로간에 제로페이 사용을 촉진하게끔 하는 방식(가령 물품/서비스의 상호부조형 구매) 등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
- 제로페이 및 경남소상공인 사랑상품권 정책의 이행과 결합되어, 경남도의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조직화(상호부조 공제조합 + 협동조합)하는 정책사업을 새로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
  -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속한 업종별로 긴밀하게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업종별협회들이 공제사업/공제조합 등 다양한 상부부조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모색이 추가적으로 필요
  - 서울 노원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상품권(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점을 고려하여, 경남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경남도가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 산업(벤처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

### ■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I-3-10-③)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I-3-10-④)

- 현행 이행계획이 잘 이행될 것으로 판단됨

###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희망장려금 지원(I-3-10-⑤)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I-3-10-⑥)

현행 이행계획들이 잘 이행될 거로 판단됨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추가 보완 요구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을 업종별로 조직화(업종별 공제조합-협동조합)하는 사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상호부조 + 자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판단
  -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조직화(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조직화)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자조적, 독립적으로 결합하여 자신들의 시민적, 경제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진지 구축에 해당됨
- 동시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별 직업훈련/재훈련’정책사업(신규 사업 기획)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추가적인 보완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요리-조리 관련 및 음식 관련 영업/경영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료 50%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의 정책 지원 사업이 자영업주의 비즈니스 관련 직업/숙련 교육과 연계하는 것은 매우 절심하다고 판단됨
    - ※ TV에서 방영 중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참조하여 추가/보완 정책을 기획할 필요

### ■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I-3-10-⑦)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 대체로 좋은 정책기획 및 그 이행기획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은 소상공인들 간의 상보부조 및 자조 원칙에 부합
- 또한 ‘소상공인 공동구매 물류센터 설립’사업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및 이행계획이라고 판단됨

### 현행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요구

- 업종별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원부자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수요 파악 및 업종별 조직화(업종별로 소상공인 공제조합, 협동조합)를 촉구/진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소상공인 대상)(I-3-10-⑧)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 현재의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협업화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이행 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 사업 주체를 공공(도, 시군)에서 민간(업종별 소상공인 공제조합/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중기 계획이 필요
  - 현재 동 사업의 주체는 도와 시군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좋은 취지(소상공인 경영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료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주체를 중기적으로, 향후 새로이 조직되는 업종별 소상공인 공제조합/협동조합에 위탁하는 정책 기획과 함께 그 과도기적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에, (앞서 언급한) 업종별 직업 훈련/재훈련 사업을 포함할 필요
  -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곤란의 하나가 적절한 직업 훈련/재훈련의 부족/결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들에 특화된 직업 훈련/재훈련 정책사업과 동 사업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추가적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제 11

#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

###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확립(I-3-11-①)

- 현재의 이행계획대로 될 거로 보임

### 장기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금융복지제도 확충(I-3-11-②)

#### 현행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경남도의 지역경제 불황과 실직자 증가로 인한 채무자 증가를 고려할 필요
  -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이행계획으로는 충분치 않을 거로 보임
-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관리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규제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기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채권추심업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책이 추가적·보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과제 12

# 중소기업 고용·투자 환경 개선

### 중소기업 시설-설비 투자및경영안정자금 확대(I-3-12-①)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 경남도 소재 기업들이 처한 열악한 영업 및 재무 현황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보완적 정책이 요구

- 이차보전 방식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적극적 산업전략과 결합할 필요
  -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식에 내재된 한계는 분명하다고 보임
  - 즉,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산업육성 전략 또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자금 공급이 아닌 까닭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편이 나올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을 줄이는 대신에,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금융 자금 공급을 늘리는 보완적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남도가 추진하는 정책금융공사 설립 등 전략적 정책금융 기구로 전환할 필요

- 동 사업이 매년 수백억 (2022년 449억, 2027년 541억)의 이차보전금(즉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순예산 손실 규모라면, 정책금융기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적극적 산업금융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 경남 청년 채용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I-3-12-②)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 근무환경개선과 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서술 및 운영 필요

※ 근무환경 개선금 지원대상: 사내 복지시설, 운동시설, 도서시설, 육아지원 등

### 현행 이행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 만약, 앞서 말한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사업’(I-1-2-⑤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이 기존 정책/이행계획을 보완하는 보완정책으로 신규 기획된다면, 동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결합하는 정책 기획이 새롭게 보완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그 경우, 해당 사업과 예산을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사업’으로 결합

## ■ 경남 내일채움 공제(I-3-12-③)

● 잘 이행될 것으로 보임

### 과제 13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 현황

●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현재 사회적경제민관추진단을 만들어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 중. 기존 지역공동체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여 책임있는 도정 실현 토대 마련. 또한 경남사회적경제5개년 계획 작성(19년 2월

말 발간 예정).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대체적으로 순탄하게 추진 중

## ■ 진단의견

-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중소기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치 강화 필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전략4: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 과제 14

####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 과제 15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 ■ 경남 공익형 직불제 추진(I-4-15-②)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국민의 신뢰도 제고, 농촌마을에 정주하는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특히 기존의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 환경정화활동 등의 사례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실천과 주민들의 공공형 활동을 통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선진국형 환경보전직불제 사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마을 선정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한 추진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함. 시행마을별 상호 점검, 신청희망마을(예비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자체별 우수 사례 전파, 지역 인력(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등)과 중간조직(농업회의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활용을 통해서 지적과 점검 위주가 아니라 컨설팅 중심으로 활동 장려할 필요가 있음

### 과제 16

####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 ■ 경남형 스마트팜 조성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I-4-16-②)

- 농식품부의 2차 공모일정(1월 중)에 따라 경남도의 추진과 현장 농업인단체와의 갈등은 여전히 상존. 농업인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의 의미가 다소 모호. 농업농촌 주요과제 중 현장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니만큼 도지사께서 직접 챙기고 참여하는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주요 현안과제로 설정 후 내실 있는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토론의 내용이 현장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실증단지 위주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일 작목 영세 농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생산단지의 확대는 고려해야할 사안임

과제 17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협치농정 실현

■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및 농어업회의소 설치(I-4-17-①)

- 경남의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첫출발을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을 통해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정책력과 실무력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협력을 가능케 할 사무국(혁신추진단) 형태의 추진체계가 없음. 기존의 위원회 형태와 차별성 없이 정기적인 협의만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지향하는 농정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음. 특히 서부청사에 입지를 두고 있는 농정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도지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농업농촌정책 보좌단위의 강화가 요구됨
- 농특위의 분과위원장 회의와 별도로, 농정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농특위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며 해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경남형 농정협치기구의 자리매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하는 ‘민관공동참여 정책추진단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농정혁신분과 위원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통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혁신추진단 설치와 운영을 위한 참여자 확대 등)
-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미설치 지역의 현장 이해도가 현저히 낮으며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존함으로 시군 현장설명회(전체 이장단교육, 농업인단체 초청 주요농정현안 설명회 등)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군별 현장 설명회 진행 이후 관심 지역부터 간담회, 설립 추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듯함

과제 18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구분	현황 및 제안사항	이행방법
바다모래 채취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파괴 및 어업인 소득 감소 우려</li> <li>○ 경상남도의 중요한 수산자원인 붕장어(바다장어), 멸치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어장가치 훼손</li> <li>○ 건설, 토목사업을 우선시 한 어장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 노력 경시</li> <li>○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인 숙원 정책</li> <li>○ 더 이상의 바다모래 채취는 없을 것이란 확실한 메시지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예산: 바다모래 채취 관련 『가칭 바다모래 관리법』제정</li> <li>○ 바다모래 채취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서 일괄 관할하도록 관련법 개정</li> <li>○ 어장 훼손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규정 마련 등</li> </ul>



구분	현황 및 제안사항	이행방법
바다모래 채취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모래 채취 금지를 통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li> <li>○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li> </ul>	
열오염 (온.냉배수) 배출 원인자에게 수산자원 조성기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 오염원인 발전소 온배수와 LNG가스 저장시설 유래의 열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가중</li> <li>○ 열오염이 해양생태계 변화를 가중, 지속시키는 해양 오염원으로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이들 배출원(발전소, 저장소 등)에 대해 수산자원 조성기금 부과하여 이를 자원조성 분야에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제 44조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대상)상 부과대상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면허를 받은 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준설토 매립지 조성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법 정비를 통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산업체를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문제 고려</li> <li>○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량 기준으로 수산자원 조성기금 부과하여 재원마련</li> <li>- 이를 활용하여 연안어장 정비사업 수행</li> </ul> </li> </ul>
노후어선 현대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 노후화로 사고위험률 증가, 선내 복지공간 부족, 승선 기피 심화</li> <li>○ 정부는 어선원 복지를 고려한 표준선형 개발('17~'20년)을 추진 중이나 구선형보다 높은 신조비로 어업인 부담 가중</li> <li>○ '노후어선 현대화'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대비 높은 금리(연 3%)로 '14년 이후 신규대출 전무</li> <li>○ '노후어선 현대화' 대출금리(연리) 인하</li> <li>○ 노후어선 대체건조 시 30% 국고보조 도입</li> <li>○ 친환경 복지어선(표준선형) 신조 시 정부 보조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3%), 개인(2%)-각 1%로 변동금리 적용</li> <li>○ 구선형 신조비 대비 추가 비용의 80% 이상 보조</li> </ul>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 불충분</li> <li>○ 정부지원 : 보험료의 15~71%(톤급별 차등) 보조</li> <li>○ 어선어업 재해율(2.03%, '05~'14년 평균)은 산업 전체 평균대비 3배</li> <li>○ 높은 재해율에 따라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부담도 높아 가입률 저조</li> <li>○ '어선·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 10%p 상향(톤급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보험료 정부보조 증액 추정치(210억원) 반영시, 정부 보조액은 1,053억원에서 1,266억원으로 증액 필요</li> </ul>
영어자금 지원 한도 및 대상자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영어자금 운용지침」개정(예정)으로 영어자금 지원축소 우려</li> <li>○ 「영어자금 운용지침」주요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한도)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 원으로 감축</li> <li>- (융자금회수) 융자 기간 전액 연장 → 3억 원까지만 연장</li> <li>- (취급제한) 상근 조합장에 대한 영어자금 취급제한 예외 인정 → 불인정</li> </ul> </li> <li>○ 영어자금은 수산정책자금 중 공급비율이 가장 높아 지원축소 시 어가경영 위축 우려</li> <li>○ 기존과 동일한 영어자금 지원토록 「영어자금 운용지침」 유지</li> <li>○ 기존의 영어자금 지원한도 유지 및 융자금회수 안 삭제</li> </ul>	

구분	현황 및 제안사항
양식시설 및 어선 이동수리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 활동이 해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시설은 고장에 대비하여 정기적 점검 또는 수리 필요</li> <li>○어업관련 자재 수리업체는 대부분 육상에 위치하여 도서·벽지 어촌에서 접근 어려움</li> <li>○양식시설 및 어선 이동수리센터 설립·운영</li> <li>○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가능</li> </ul> </li> </ul>
양식사료 및 어업유류 자조기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경영 비용 중 양식사료 및 유류비의 의존도는 매우 높음</li> <li>○그러나 양식사료 및 어업유류 가격변동에 따른 어업경영 채산성 불안정 초래</li> <li>○양식사료 및 어업유류 자조기금 도입</li> <li>○사료·유류 안정기에 구매액의 일부를 가격완충을 위해 자조금으로 적립, 사료·유류 가 격급등 시 적립금을 활용하여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li> <li>○기금은 어업인 50%, 정부 50%,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부담</li> <li>○사료·유류 자조기금 운영은 무임승차 배제, 자조금 기여자 혜택원칙, 사용량 비례 및 극소액 분담 원칙 및 공급시점에서 자동공제 등의 원칙으로 운용</li> </ul>
어업폐기물 리사이클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쓰레기는 수산물 생산, 어촌관광 등 수산산업에 경제적, 생태적 피해를 초래</li> <li>○해양쓰레기 중 어업활동 등으로 인한 침적 폐기물은 전체의 26% 차지</li> <li>○어업폐기물 수거 및 관리 기관 분산</li> <li>○종합적 어업폐기물 처리기구인 ‘어업폐기물 리사이클 센터’ 설립</li> <li>○어업인과 정부가 해양폐기물처리 비용 분담</li> <li>○폐기물재활용 시설 및 장비(용융기) 지원</li> </ul>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유통의 효율성 저하</li> <li>○유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물류 및 유통기능의 효율감소</li> <li>○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 건립 자담비율 인하</li> <li>○산지 수산물 직거래 확대 및 중소규모의 산지 직거래물류센터 건립 지원</li> </ul>
수산 직불제 신규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에 비해 취약한 수산 직불제(2016년 기준 농업의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수산직불 75억원, 농업직불 1조 9,092억원의 0.4%수준으로 극히 낮음</li> </ul> </li> <li>○근거법상 직불제 지원대상 및 시행목적도 농업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정(수산직불법 제1조)</li> </ul> </li> <li>○수산업도 중요한 식량안보산업이므로 농업직불제 수준의 직불제 도입을 통한 형평성 확보 필요</li> <li>○수산직불제 개정</li> <li>○수산직불제 개정 및 신설-휴어 직불제 등</li> </ul>
기타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해 양식산업 육성-연안오염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생산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을 이용한 외해양식 기술의 선도지역으로 육성</li> <li>- 외해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세제지원 및 기반 시스템 구축지원</li> </ul> </li> <li>○종자산업 육성-경상남도는 국내 양식 산업의 중심지-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종자 산업 육성을 통해 양식 산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공급센터 설립</li> <li>- 종자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북 수산생명산업 교류확대를 통한 남북의 수산생명 상호발전에 기여함</li> </ul> </li> <li>○스마트 양식산업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li> </ul> </li> <li>○AI 수산업 육성(어선어업, 수산양식업, 수산가공업)</li> <li>○수산현장 행정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수산행정, 맞춤형 수산행정 도입</li> </ul> </li> </ul>

구분	현황 및 제안사항
기타 제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한 갯마을 쉼터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 쉬며, 체험할 수 있는 갯마을 조성</li> <li>- 국민 쉼터로서 가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힐링 갯마을 쉼터사업 추진</li> </ul> </li> <li>○수산식품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에 국내 최대의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li> <li>- 동북아 최대, 최고의 K-Seafood Valley 조성하여 수산식품 산업 육성</li> </ul> </li> <li>-할랄식품의 메카로 발전시킴</li> <li>○유령어구, 어망 등 폐어구 수거 지원사업을 통해 연근해 자원 회복 및 생태계 복원</li> <li>○바다숲 조성사업의 확대를 통한 건강한 연안생태계 복원</li> <li>○귀어, 귀촌인 정착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어촌계 가입이 필요하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li> <li>- 경상남도 지원 귀어학교, 수산업 창업 교육 이수자가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li> <li>- 경남발전연구원 활용,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보다 젊은 어촌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신규 어업인의 정착활동 지원방안 마련필요</li> </ul> </li> </ul>

## 2 사람 중심 경남 복지

### 전략1: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강화 및 공공의료체계 혁신

#### 과제 19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19년도 도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 도 교육청과 업무협의로 2019년 수학여행비, 체육복비, 온종일 돌봄 예산 지원
- 2020년 부터 관련기관 협약을 통해 교복지원 단계적 실시
-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 중, 먹거리위원회 구성 완료
- 서울시와 지역푸드플랜 상생협약으로 김해급식지원센터와 서울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매칭 사업 실시

##### ■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화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안 준비 중
- 2019년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비 10억 원 확보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시민단체의 요구인 비유전자 변형식품(Non-Gmo)의 학교급식 전면공급은 곡물자급률 ('17년 기준 23.4%)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 점차적으로 학교급식에 적용 필요
-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부담 해소 방안 필요

## 청년이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 추진 계획 확립

- 사회혁신추진단 내 청년정책담당 신설
- 경남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중
- 2019년 4/4분기까지 시군별 청년정책담당부서 지정 및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
- 2018년 11월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 청년터 조성

- 도내 권역별 4개소 조성 계획, 2019년 1개소 사업비 5억 원 확보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

- 청년 1인가구 대상 더불어나눔주택사업 확대를 위하여 타시도 벤치마킹 및 사례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중, 2019년 예산 1억 5천만 원 확보
- 도시 노인가구주 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저소득 청년대상 나눔주택사업 계획 중
- 양산, 사천과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협의 완료(2018.12)

### 점검 요약 및 제언

- 시군별 청년네트워크 구성으로 도 및 타 시군과 교류활동 추진 필요
-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필요
- 청년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공간 기획팀'구성으로 위치와 공간구성 의견수렴
- 청년을 위한 나눔주택사업시 성별 수요와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 필요
- 신혼희망타운 조성사업의 조기 시행 및 지역맞춤형 타운 조성

##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도지사 직속 경남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신설 및 인구전략담당 증원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안 제출
- 인구정책 도민자문단 1월 중 구성 및 미래연구 맵 구축 용역 계획

###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 2019년 1개소(의령군)설치 사업비 확보, 2020년 개원 예정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 2019년 동부권 1개소(밀양)설치 사업비 확보, 2020년 개원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0개 목표 달성(42개) 및 2019년 예산 확보(66개)

### 보육료 차액 지원

-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50%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료 100% 지원 예산 확보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파견

- 공동육아나눔터 2018년 목표달성, 2019년 3개소 확충 예산 확보
- 긴급육아도우미 사업 추진 및 공공가사도우미 용역 중

### 어린이 집 공기청정기 설치

-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완료 및 7,081대 설치 지원 완료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구성 시 관련 당사자 참여 필요
- ‘맘센터 신축 시 사업비 과다 소요로 기초지자체 신청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신축보다는 기 시설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추진 필요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 지역별 수요 조사 및 민간산후조리원과 논의 필요. `19년 밀양에 설치 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 확대 설치 추진
- 기존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희망조사 및 확대 적극 추진. 농촌지역부터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가 필요함
- 보육단체와 보육료 관련 간담회 필요

### 과제 22

## 지역 공공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 ■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 서부경남 공공병원 필요성 보건복지부 제시 위한 정책용역 중
- ‘설립 운영 계획 및 건립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포함 추가 용역 예정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의체가 정책자문 역할 예정

###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 2019년 초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용역 예정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구성 예정
- 당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읍면동 건강위원회 매년 10개씩, 총 40개 확충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 편성

##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 예정
- 도 회계과,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경상대 병원과 협의 및 부지 물색 진행 중
- 병원 건립비용 민간투자 관련 넥슨재단과 협의 중
- 부지 확보 후 2019년 상반기 병원건립 운영위원회 구성 예정

## ■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

- 경남형 치매관리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
- 다년도 계획 및 구체화가 필요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공공의료정책 담당 신설

- 2019년 1월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 2019년 3월 위탁 공모, 6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계획
- 2019년 운영 예산 6억원 반영, 향후 운영비 년 10억원 예상
- 2019년 1월 보건행정과 내 공공의료정책담당 신설

## ■ 점검 요약 및 제언

- ‘경남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실시
  - 읍면동 단위 3가지 유형(도시형, 농어촌형, 혼합형)의 ‘경남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실시 시범사업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스마트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선임복지공무원을 ‘케어매니저(센터장)’로 임명
  -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대상별로 ‘케어플래너(복지/간호공무원)’를 배치
  - 케어플래너는 대상별 현황과 돌봄수요, 지역내 돌봄자원 등을 파악하여 ‘대상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케어매니저는 이를 취합하여 ‘읍면동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완성
  - 케어매니저는 지역내 돌봄 관계자들과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
- ‘경남스마트케어’ 4개년 계획 일정 확정 및 시행



- 준비기(2018 하반기): 경남스마트케어 4개년 계획 수립
- 도입기(2019): 경남스마트케어 읍면동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
- 확충기(2020): 경남스마트케어 도내 전 시군 확대
- 정착기(2021 - 2022 상반기): 경남스마트케어 체계 구축

●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은 ‘경남스마트케어’ 4개년 계획과 2019년 ‘경남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추진에 따라 구체적 증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경남스마트케어’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 만 아니라, 보건직 등 관련 직종의 공무원 증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경남 치매관리 4개년 계획 수립

- 경남 치매관리의 체계는 갖추어 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 달성 위해서는 치매관리 4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시군 단위 치매관리계획의 수립
  - 경남도의 계획은 경남 시·군의 계획을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 따라서 경남도의 계획과 함께 시군 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치매관리 목표치 제시
  - 치매관리계획의 목표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경남도 계획의 4년 후 목표치를 10% 미만 한 자리 숫자로 설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달성(예시: 1차년도 현상유지, 2차년도 10.6%, 3차년도 10.3%, 4차년도 9.9%)
- 치매관리를 위한 의료와 복지 연계
  - 치매관리는 ‘경남스마트케어’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정책 담당자도 치매관리에 참여 필요
  - 예방과 치매 조기관리를 위한 협조, 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 관련기관의 협조 필요

## 전략2: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실현

### 과제 23

## 노동자 권익 보호

### ■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 노동전담부서 설치(일자리 경제국 노동정책과 내 노사정책담당, 노사협력담당, 노동복지담당)
- 민주노총은 중앙본부 결정에 따라 참석여부 결정 예정(1월말)

### ■ 이동노동자쉼터조성

-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미완료로 2019년 사업비 미확보

### ■ 돌봄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 설치

- 사업비 미확보

### ■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미 실시로 2019년 사업비 미확보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도청 비정규직 157명 중 83명 전환 결정, 2018년 목표 달성

###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현재 창원, 진주, 김해 3개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중
- 비정규직 근로자지 실태조사 예정(2019년)

### ■ 생활임금

- 최저임금 인상 논란 후폭풍으로 논의 시작도 못함

- 2019년 생활임금 설계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계획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2019년 1/4분기에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예정
-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 중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완성 및 ‘이동노동자쉼터’조성 사업비 확보 필요
- ‘돌봄노동자 상담 및 건강센터’설치 사업비 확보 필요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및 감정노동자 상담센터조성 사업비 확보 필요
- ‘비 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등 비 정규직 근로자 지원 및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실행의지 반영이 필요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실시 시기 조율이 필요

### 과제 24

##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및 년차별 정책 시행계획 수립 완료
- 2018년 8월 여성특보 신설 및 임명
- 2019년 3월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예정
- 2020년 여성정책 연구 전담기구 재단형태로 설립 추진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18년 목표치 달성(16.8%)

### ■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 민관 안전망 강화와 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위한 With you(시군)사업 및 피해자 치료회

복 지원 사업비 미확보

- 경남여성폭력사이버상담창구 운영 예정

## ■ 점검 요약 및 제언

- 2019년 3월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철
- 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TF 구성 필요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상향 및 지속 관리
- 젠더폭력예방교육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시설종사자 인건비 상향
- With you(시군)사업과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사업비 확보

### 과제 25

##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2019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예정,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필요
- 2019년 4분기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용역 완료

###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확대: 2018년 2,435명→2022년 2,957명으로 4년간 522명, 연평균 130명 일자리 창출 계획
- 법정 의무 구매율: 2018년 0.6% → 2022년 1% 수준으로, 4년간 0.4%, 매년 0.1% 증가 계획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차별 금지조례 제정 및 용역 전 사전에 장애인당사자, 관련교수,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조례와 용역 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책 개발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

- 새로운 정책의지 없이 기존 사업에 의존 경향 → 시장에서 배제된 보호고용 장애인의 및 최저임금 보장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 활성화 정책 적극 개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판매 현장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 타 시도에 비해 판매기반 취약, 2,000여개 공공기관(부서)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홍보, 물류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과제 26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 임플란트, 틀니, 관절수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 틀니 및 임플란트 사업 수요 조사 및 2019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작성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142명) 및 지원사업 수요조사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잠정 보류 결정

■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찾아가는 복지센터’

- 도내 308개 전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완료
- 2022년까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000명 증원 계획

■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 2018년 9월 경남이 보건복지부의‘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행과제를‘경남 사회서비스원 추진’으로 수정할 필요 발생
- ‘경남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
  - 2018. 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지역 지정
  - 2018. 10 - 2019. 1: 재단법인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 2019. 1 - 2: 경남 도의회 조례 제정 예정
  - 2019. 3 - 4: 재단법인‘경남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정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의 형식적 전환 완료 이후 실질적인 기능 전환을 위한 ‘경남스마트케어’ 4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
- ‘읍·면·동 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등 관련 과제는 ‘경남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전략3: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 과제 27

## 최적의 대기질 관리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운영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7년 9개 시, 22개 군(9개 군 미설치) > 18년 신설 5개소, 교체 1개소
- 19년 신설 6개소, 교체 2개로 개선 이후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 연 1회 운영

###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 동남권 미세먼지 오염원조사 용역 수행
-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역학조사 실행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
- 18년 친환경차 보급 1,279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80대로 3,859대의 성과가 있었음
- 19년 예산은 47,124 백만원으로 18년 대비 10,728백만원이 증가
- 구매수요는 늘고 있으나 보조금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함

### 점검 요약 및 제언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운영

- 대기오염망 확충에 따른 운영예산 증가 및 관리인력 부족 대책 강구
-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미설치 지역 우선 정책 필요, 17년 9개 군 미설치로 표시 되었으나, 18, 19년 설치를 통해 어떻게 개선되는지 설명이 없음, 미설치 지역을 남겨두고도 기존 설치된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면 지역선정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언급 조차되지 않고 있음,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함,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축되어야 함
- 교육청과의 협의 및 공동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과의 공동 정책 수행이 필요
-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한 연구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질 관리와 관련한 연구기능을 포함시켜야 함
-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하는 것은 피드백 후 평가할 기회마저 없는 전시행정임. 자문위원단으로 전환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부터 연중 최소 6회 이상 운영되어야 함

●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질 관리

- 동남권 미세먼지 오염원조사 용역 수행 후 원인자 확인 및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역학조사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 특히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예경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은 매우 형식적인 정책임. 미세오염원에 대한 영향 등이 어떠한지 모르면서 협약체결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약함. 따라서 대기 오염측정망과 간이 측정망을 같이 운영하고 발생원 중심지역에 위치한 업체들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효과적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됨.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조업 단축, 도로청소 강화 등 정책시행 시 필요한 조직 체계, 소요되는 예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움
-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은 항목만 있을 뿐 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무함. 이런 항목은 도정 4년계획 이행 내용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만약 포함시킨다면 관련법령 시행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도에서 펼칠 행정 내용을 적시해야 할 것임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 이 정책은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임. 18년 친환경차 보급 1,279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80대로 3,859대의 성과가 있었음
- 19년 예산은 47,124 백만원으로 18년 대비 10,728 백만원이 증가했지만 구매수요가 늘어 보조금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버스중심의 수소차 지원이 바람직 함. 지역적으로도 홍보 및 효과가 큰 관광지, 공장밀집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수소차의 경우 수소충전소 확대가 절실한 상태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함
- 미세먼지 오염원 조사 및 도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모니터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오염저감 MOU 체결 및 사업장 관리 철저
-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로 대기오염물질을 환경용량 이내로 규제(중장기 과제)
- 미세먼지 법안 통과 시 대기관리권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 친환경차 보급확대 방안, 전기 및 수소 충전인프라 확충, 경남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방안 마련

## 과제 28

### 낙동강 수질 개선

#### ■ 낙동강 수질 개선

- 환경기초시설 설치: 2018년 76개소 1,472억원 투입, 19년에는 하수처리장 41, 하수관로 34, 가축분뇨 3 등 총 78개소 1,534억원 투입
- 오염하천 개선사업: 7개 시군 9개 하천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
- 녹조발생 선제적 대응
  - 하천 수질모니터링 지속실시
  - 낙동강 본류 취 정수장 관리강화
  - 녹조발생우심지역 지자체 책임관리제 추진
- 점,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낙동강 수계 폐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 강화
  - 하폐수 총인 방류수질 강화 운영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 추진
  - 남강 수질개선 T/F 운영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총량관리 목표수질 및 배출부하량 관리
- 4단계 경남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낙동강 보 개방
  - 보 개방에 따른 도의 현장대응팀 운영
  - 분야별 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강화

## ■ 점검 요약 및 제언

- 환경기초시설 설치,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녹조발생은 낙동강 본류의 지체시간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녹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하지만 녹조발생 기에 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낙동강 본류 취 정수장 관리강화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정량적인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하며, 실천할 조직과 예산을 구성하여야 함
- 녹조발생 억제를 위해 녹조발생우심지역 지자체 책임관리제 추진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지자체가 노력해 녹조발생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오히려 녹조발생 우심지역의 모니터링 횟수 증가, 예찰강화 및 조기정보 전파 등이 중요한 업무 일 것임. 이 정보를 종합하여 도민들에게 알려줄 도구, 조직,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점,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정책이 필요. 특히 해당 지역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비점오염원의 유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확보해 내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됨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해 총량관리 목표수질 및 배출부하량 관리 및 4단계 경남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함
- 보 개방에 따른 도의 현장대응팀 운영, 분야별 상황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강화는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낙동강 보 개방에 따라 경남 내 농,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녹조문제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임. 따라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각 정수장의 수질(특히 조류독소) 자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연계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오염원 관리를 위한 하수도 보급률 제고, 녹조 발생 주요인자 총인(T-P) 저감 시설별 방류수질 강화 운영
- 도시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 확대 추진과 농업분야 비점저감대책 필요, 특히 양분관리제 도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필요
- 농업 배수관리, 대단위 시설원예단지 의무 비점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농업 비점오염 관리지역 신규 지정, 관리지역 지정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 확대
- 낙동강 지류총량제 도입,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추진사업 확대 및 환경친화적 통합관리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필요
- 난분해성 오염물질 측정관리가 가능한 TOC(총유기탄소량) 도입과 유해물질 관리제도 운영
- 녹조 우심기간 조류경보 발령 및 모니터링, 보 개방 대응팀 운영 강화
- 환경부 및 6개 시도간 수질관리 협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도경계 목표수질 설정, 낙동강 상류 수질개선시설 투자 확대

## 과제 29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 에너지 전환사회 구현

- 경로당 태양광,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영농형, 산단 지붕, 태양광 단지 발굴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추진
-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 및 설계
-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 구성 및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등 로드맵 제시

## 수소사회 실현 기반 구축

-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 2022년 까지 수소차 2,100대, 충전소 17개소 보급 계획 시행 중
  - 충전소 조기구축: 2019년 진주/통영/김해, 2020년 거제/양산 등
  - 2019년 수소버스 확보 예산 미반영

- 수소사회 기반 확산
  - 수소 전문가 협의체 구성
  -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 개최 계획

## ■ 점검 요약 및 제언

- 태풍이나 폭우 시 태양광시설의 안전진단이 필요함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ESS(에너지 저장장치)설비의 화재사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체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성에 관한 용역과제가 전국단위로 진행 중이며 경상남도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경남TP 주관). 주민수용성 문제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경상남도 내 에너지 총괄 콘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함
- 경로당 태양광,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홍보가 매우 중요함. 포럼개최 및 언론노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형, 산단 지붕, 태양광 단지 발굴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추진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 및 설계는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동반하므로 전문가와 주민, 사업자, 행정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이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 구성 및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등 로드맵 제시 는 좋으나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노출을 극대화 해야 하며, 도의회와 같이 공청회, 포럼개최 등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보급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과감한 투자로 중앙정부의 관심유도 요망
- 수소버스 도입 예산 확보 필요
- 수소전문가 협의체의 명확한 성격 규정 및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 신설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 관련 사업 주도 필요
- 시군별 구체적 보급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산업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반영한 수소산업육성종합계획 추진 시 전문가 협업
- 전시회 및 포럼 등 일회성 행사보다 수소관련 R&D 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더 중요
- 무공해 수소차 보급은 과제 27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지역적으로는 창원 김해 등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든지 대중교통 중심으로 지원차량을 선택, 집중해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자동차수소담당 신설은 바람직하며, 수소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도구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함

## 전략4: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 과제 30

####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환경 개선

##### ■ 문화예술협치위원회 구성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

- 2018년 12월 경남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 방침 수립, 2019년 1월 위촉 및 첫 회의 예정
- 2020년 경남콘텐츠 진흥원 설립 추진

##### ■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 2019년 1월 현재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검토 용역 추진 중

#####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계획 수립(2018.11)
- 2019년 상반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설명회 예정(3월, 8월)

##### ■ 경남정신 확립

- 선비문화, 남명학 연구 예산 확보
- 2019년 3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7월 등재신청 대상 선정
- '가야사특별법' 제정 지속 건의

##### ■ 경남예술인 그라민금고 설치

- 2019년 1월 '경남예술인 그라민금고' 설치 근거 조례 제정·공포(1.3)

##### ■ 예술인복지센터 건립 및 예술인 복지 조례 제정

- 2019년 1월 예술인복지센터 건립 근거 경남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1.3)

## ■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및 지원 조례 제정

- 경남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2018.12) 및 지원 조례 시행(1.3)
- 경남예술창작센터 사업 예산 4억원 반영(2억원 추경 필요)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제조업 침체에 따른 경남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인 문화·관광·스포츠산업 산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문화예술분야 진흥 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업 및 지역예술인 참여 체계 구축 필요
- 인문학, 역사, 예술, 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경남콘텐츠진흥원 조기 설립 필요
-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사업, 관광사업, 도시재생사업 정책의 상호 연계 필요
- '가야사특별법'제정 촉구 위한 지역관심 제고 및 여론 조성

### 과제 31

## 생활 속에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확충

### ■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 창원시 새야구장 건립 200억 원 지원

###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및 편의시설 확충

- 2019년 지역 장애인 체육회 4곳 설립, 장애인 체육관 6개소 공모 준비, 체육교실 1개소 추가 추진

### ■ 생활체육 활성화

- 2018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1개소 김해 공모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체육시설 활용 민관거버넌스 구축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장애인 및 사회 체육기반 조성
  - 장애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구체화
- 노인 생활체육 참가율 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체육시설 18시간 개방 추진
- 공공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정책 연구 필요

## 과제 32

### 모두가 찾고 싶은 힐링관광 조성

####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조성

- 힐링 휴양관광 상품개발 및 남해안 도보여행길 조성 중

#### 열린관광 1번가 조성

- 열린관광 1번가 조성 등 사업수행 위한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 용역 중
- 2019년 1월 경남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MICE 담당 신설
- 관광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수립 중

#### 점검 요약 및 제언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인 경남의 웰니스 관광 육성
  - 힐링 휴양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과, 향노화산업과 등 관련부서, 기관간 협업 필요
  - ※ (향노화산업과)웰니스관광 프로그램(예산편성)/(관광진흥과) 프로그램 홍보, 관광객 유치
  - 산악치유관광, 해양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필요
-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과 MICE 산업 육성
  -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 담당부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경남에 적합한 기관설립을 위한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 지역 관광산업 컨트롤타워인 관광마케팅전담기관 설립으로 경남 관광인증제, 관광경찰, 관광서비스 고도화, 열린관광 1번지 조성, 산업관광 시범사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등 추진
  - CECO 운영방안 창원시 협의 및 확정, MICE 산업 육성 위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과 공동 스포츠마케팅 강구
- 관광사업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과 정책 연계
- 문화예술 및 관광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문화 관광 사회적기업으로 소외계층 복지 증진
  - 문화예술 및 관광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해당 분야 기관, 위원회, 전문가와 협업체계 구축

## 전략5: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조성

### 과제 33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

### 도시재생 활성화

- 2018년 11월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출범
- 2019년 경남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예정, 센터운영비 3억원, 뉴딜사업 83억원 편성

### 점검 요약 및 제언

- 공공건축가제도 및 공공건축재생 시범사업 TF팀 구성
  - 공공건축가제도: 건축전문가가 공공건축물이나 정비사업 기획·설계를 자문(서울,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운영 중)
- 공공건축재생 시범사업: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500억원), 진주혁신센터(300억원). 동남관리공단전시장 중 1곳 선정하여 TF팀 통해 추진
- 도시 재생분야 타 분야 연계 및 전문가 코디, 주민 협치 추진체계 구축
  -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관광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정책 연계
  - 도시재생과 지방대학 활성화 연계 및 시민에게 도시재생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제공
  - 경남도시재생센터에 외부 전문가 보강 필요
  - 도시재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문화 시설 공사비의 10%를 향후 5~10년간 시설 운영 문화프로그램에 할애하는 '공공문화시설 공사비 프로그램 할당제' 고려
- 스마트시티 유치 자문 연구단 구성
  -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진주 혁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지원
  - 기초지자체 의지 확인 후 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공동 추진 필요
- 대규모 단지 조성 시 공원 총량제 실시
- 18시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방
- 경남 디자인센터 + 국립 남부 도시건축센터 구축
  - 국책사업으로 선점 요, 광주와 부산이 유치 노력 중

- 시민이 참여하는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개설

#### 과제 34

###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구현

####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구현 추진계획 수립
- 예산 1억5천억원 편성

#### ■ 저상버스 보급 확대

- 2018년 7대 도입

#### ■ 점검 요약 및 제언

- 2019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예산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담당 부서가 특정되어야 함

#### 과제 35

### 수요자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 ■ 광역교통체계 확충

- 부울경 광역교통기구 설립준비
- 지역 기관간 업무협약 추진 중

#### ■ 브라보(100원) 택시

- 15개군 579개 마을에서 운영

#### ■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개통

-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서부경남 고속도로 (2019년 확정, 2028년 준공)와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전-마산 2020년 완공, 진주-광양 2021년 완공)를 연계하는 교통체계 준비. 부전-마산 전철 운행주기 조정 등 사용자 편의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광역교통망 구축 촉진
  - 산청-진주-사천, 고성-통영-거제, 창원-함안-김해 등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
  - 기존의 김해-창원, 김해-부산, 부산-양산은 확충
  - 거제-부산간 광역교통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정책 수행

### 과제 36

##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

### ■ 범죄환경예방 도시조성 및 안전감시단 도입

- 안심알림서비스, 지능형 cctv 설치, 스마트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 관련 예산 16억원 편성

### ■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강화

### ■ 화재방재 대비시스템 강화

### ■ 학교건물 내진보강 및 스프링 클러

## ■ 점검 요약 및 제언

- 안전 및 범죄환경 예방 도시 강화
  - 위험 감지-예보-대피 시스템 구축
  - 다양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도입
- 아파트 품질검수 횟수 확대
  - 경기도의 사례처럼 4회 이상 추진

- 단독 다가구 주택도 신청자에 한해 품질검수
- 도정 자문위 내 전문가 부재로 방재 및 안전 분야 상세 점검 불가

### 3 함께 여는 혁신 도정

## 전략1: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만드는 사회혁신

### 과제 37

##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

### 대의민주주의 제도 보완(Ⅲ-1-37-①)

-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
- 경남도 주민투표조례, 경남도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조례 개정
  - (1)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는 국회의 소관이나,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요청
  - (2) 도 조례의 개정에는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임(\*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비교 검토)
  - (3)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 홈페이지 '온라인 토론광장' 활용 저조. 도민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온라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점검 요약 및 제언

- 국회의 법률 개정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의 자치분권협의회 등을 통한 국회 법률개정의 당위성 여론조성 필요성
-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법률 개정 필요성 요청

### 과제 38

##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Ⅲ-1-38-①)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참여예산 교육,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역량 강화
- 19년 2월 중으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안 마련

- (1) 주민참여예산조례의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및 선진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 검토 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
- (2)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교육 등 지원 점검
- (3) 도정4개년 계획 상 주민참여예산 증액으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확대 필요(19년 23억 → 600억(일반회계의 1% 수준, 18년 서울시 참여예산 541억))

## ■ 점검 요약 및 제언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발[지역주도형 사업발굴 44개 읍면동, 46개 사업(총2,068백만원),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추진 15개 사업발굴(총2,994백만원), 1억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우선순위 조정(주민참여예산위, 2019년 당초예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운영[분과위원회 증설(6개→7개, 안전건설행정분과 신설), 위촉직 위원 공모비율확대(35%→80%)로 도민참여기회 확대 총79명(당연직 14, 위촉직 65<공모 52, 추천 13>)]
-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추진방향 연구를 위한 지역연구회 설치(12명, 전문가 7, 시민단체 3, 주민참여예산위원 2)]
- 주민참여예산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 운영(8개 시군, 통영, 김해, 거창, 함안, 창녕, 고성, 의령, 하동)
- 비교적 이 분야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 주도의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한 도의 각종 지원 필요
- 도민참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각종 모범 자치조례 개발 및 제정 강구

## ■ 도민 참여 활성화 협치(Ⅲ-1-38-②)

- 도정배심원제와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읍면·동장 도민 공모제 시범 시행
- 국민소송제도입, 관련 법 제정 시 적극 실시 추진
  - (1) 도정배심원제
    - ① 도정배심원제는 2009년 김태호 도지사 시절 제정된 조례인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
    - ② 도민 참여 효과, 민주주의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함

- ③ 도정배심원제 도입의 취지,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점검 필요
- (2) 읍면동장 공모제
  - ① 광주 광산구, 서울시 금천구(민간 전문임기제), 세종시 등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응모제 실시
  - ② 세종시의 경우 2018년 성과를 가지고 2019년 5곳으로 늘리면서 시민이 면접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③ 경상남도 전체 308곳의 읍면동 중에 2-3곳을 시범 실시하는 것임
  - ④ 읍면동장 공모제를 확대하여 52년 이후 폐지된 읍면동장 및 의원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마을회의’를 경남 주도로 복원하고, 상호경쟁 및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양산
  - ⑤ 이를 위해서 창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체와 적극 협의 및 행정안전부에 읍면동장 및 의원 제도 복원 계획 수립 요구(읍면동장은 공무원, 의원은 주민 중에서 선출한 무급직 형태)

## ■ 점검 요약 및 제언

- 민선 7기 자문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분과회의, 운영위 워크숍 등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정배심원제와 읍면동장의 공모제 운용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읍면동장의 공모제 운용은 희망 기초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 강구 필요
- 국민소송제의 경우에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정책협의 등을 통한 추진 필요성 있음

## ■ 감사위원회제 도입 및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Ⅲ-1-38-③)

-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 감사위원장 및 위원 임용·위촉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출범
  - 청렴옴부즈만, 민간암행어사 운영을 통한 도민 감사참여 활성화
- (1) 국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성 있음
- (2) 현행 법 아래서 도의 조례 제정 시 법률과 조례의 충돌 문제 점검 필요

## ■ 점검 요약 및 제언

- 5개 시도(서울, 제주, 충남, 광주, 세종)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감사위원회 하부조직(사무국) 설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



-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 적극적인 근거규정을 두도록 요청하고, 구체적인 사·도의 조직과 운영은 도 조례로 가능토록 요청 필요

## 과제 39

### 도민정책참여 플랫폼 마련

#### ■ 뉴미디어 도민 참여 확대(Ⅲ-1-39-①)

- 도민반응 및 참여도가 높은 SNS 채널 중심 운영
- 도 SNS 콘텐츠보강 및 활성화로 공감건수 확대
  - 도 SNS 도민참여확대
  - 도민참여 인터넷방송 및 라이브방송 실시
  - 도 SNS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 중 전문인력 보강 및 배치 필요
  - 도 SNS와 도 홈페이지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추진

#### ■ 점검요약 및 제언

- SNS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위한 기반구축(도 본청 2층 스튜디오실 리모델링). 이 분야는 적은 예산투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신속한 이행이 필요
- 전문인력 보강과 전담부서의 배치 필요

#### ■ 도민과 함께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Ⅲ-1-39-②)

- 도민의 수요에 맞는 문화공간과 쉼터 조성으로 서부청사의 도민 활용도 제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한 수목 재배치 등으로 도민에게 계절별 볼거리 제공 등 정원의 가치 제고
  - '행복화원 모니터단' 구성 및 헤커톤 실시로 리모델링안 작성
  - 온-오프 라인을 통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 시군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시군 상징숲 조성 및 간담회 실시
  - 서부청사 정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 수목의 특성을 고려한 계절별 볼거리 조성
  - 서부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정원활용방안 강구

#### ■ 점검요약 및 제언

- 2019년 본예산 미 반영
- 서부경남 도민을 위한 공약이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성
- 행복화원조성 시, 서부경남 도민 대상 공모제 검토

###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Ⅲ-1-39-③)

-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통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 품질검수 시 도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
  -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통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시 도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
  -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품질검수 결과 공개

### ■ 점검요약 및 제언

- 검수위원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
-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검수단에 도민 및 민간전문가 참여하도록 검수단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음

## 전략2: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

### 과제 40

####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

##### 도의회와 협치 시스템 구축(Ⅲ-2-40-①)

- 집행부와 도의회 간 정기적 소통전담기구 역할 추진
- 도의회와 소통을 확대하여 도정운영 협력체계 강화
- 도의원들의 정책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책보좌기능 강화
  -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의회와의 소통 전담 추진
  - 의장단 및 상임위 간담회를 통한 사전 협의 추진
  - 도의회 상임위 정책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추진
  - 당정협의회 상설화 및 집행부·상임위원장단 협의회 조례화

##### 점검요약 및 제언

-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및 조직 개편 시 도의회 상임위 정책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추진(입법담당관실에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11명, 미디어 홍보담당 3명 등 총14명)
- 이는 도지사가 의회를 배려한 아주 긍정적인 정책의지의 반영이라 판단됨
- 당정협의회 상설화 및 집행부·상임위원장단 협의회 조례화를 위한 연구 필요

### 과제 41

#### 통합행정체계 구축

##### 통합교육행정체제 구축(Ⅲ-2-41-①)

-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행정의 효과적인 논의와 집행을 위한 협치 강화
- 교육 사안별 도, 도의회, 교육청의 사전논의 채널 구축
  - 도, 도교육청 간 통합적 교육행정을 위한 소통 협의

- 교육청 파견 교육협력관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 적극적 협의안건 발굴
- 홍준표 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사례에 비추어, 도지사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도와 교육청의 협의체제 가동을 위한 조례 신설 검토)

## ■ 점검요약 및 제언

- 교육협력관 파견과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및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등으로 이전 도지사 시절의 도와 교육청 간의 심각한 갈등관계에 비추어보면 아주 전향적인 정책이라 평가됨
- 앞으로도 보다 유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화의 필요성 있음

## ■ 중앙정부 소속기관과 협력(Ⅲ-2-41-②)

- 중앙정부 소속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관리
  - 도내에 있는 중앙정부 소속기관 현황 관리 및 공유
  - 협력관계 유지 및 강화로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체계 구축
  - 부서별 협력 애로점 및 건의사항 모니터링
  -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함(예, 산림청, 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 등 : 정부조직법 개정)
  - 현행법 체제 아래서도 가능한 업무협력 등은 필요함(예, ONE STOP OFFICE를 창원중앙역 혹은 도청에 마련하여 상시 상호협력 체제 가동 방안 강구)

## ■ 점검요약 및 제언

-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없지만,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형의 정책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 있음

### 과제 42

##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Ⅲ-2-42-①)

-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 등

- 동남권(부울경)
- 전남
- 서울
- 시군 행정협력 지원(행정과)
- 공동사무의 경우(예, 지리산권, 남해안권, 낙동강권 등)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적극적인 활용 필요함
- 특히, 지리산관광개발조합(남원, 곡성, 장수, 구례, 하동, 함양, 산청)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조합을 특별지방정부로 설립 검토(부울경 광역교통 및 항만청, 지리산관광청, 한려해상청)

## ■ 점검요약 및 제언

- 부울경, 전남, 서울 등과 상생협약 체결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내 시군과의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경남형 조합 혹은 특별지방정부(예: 지리산관광청, 한려해상청 등)를 적극 설립 검토

## 전략3: 공무원의 자율로 이루는 행정혁신

### 과제 43

##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

### 정보공개, 자원 공유로 열린 도정 실현(Ⅲ-3-43-①)

- 공공데이터 발굴, 표준화 및 개방 확대로 민간 비즈니스 창출
- 공공자원예약 포털 서비스 운영 및 공유자원의 도민 소통공간 조성
- 도민이 알기 쉬운 예산결산 정보 공개
- 안전·보건·식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발굴 및 사전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자원 공유
  - 도민 소통공간
  - 알기쉬운 재정
  - 도민중심 정보공개
  - 도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공개 제도 도입
  - 도청 청사 시설 ‘도민 개방 확대’
    - ① 청사 공개 비율을 연도별 목표치가 필요함. 현재의 현황 비율과 함께
    - ② 도청 청사만 아니라 출자, 출연 기관, 사업소에 대한 시설도 함께
    - ③ 기초자치단체 시군에도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④ 유희공간의 도민 활용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점검요약 및 제언

-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전수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희공간의 도민 활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체제 유지 필요

## 도민 중심의 규제 혁파와 민원 개선

### 빅데이터를 이용 민원·복지 분석 및 활용(Ⅲ-3-44-①)

- 광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및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추진
- 증거기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과제 분석 추진
- 시군, 유관기관 등과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플랫폼 구축) 행안부 지역 빅데이터 허브 공모 참여
  - (데이터 확보) 데이터 발굴, 표준화 및 확보 방안 마련 등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 (협력체계) 시군, 유관기관, 대학 등과 상생협력 도모

### 점검요약 및 제언

- 아직 용역사업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추진(Ⅲ-3-44-②)

-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편익 및 만족도 제고
  - 3개소(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 민자도로 3개소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 경남형 Hi Pass 제작 및 전국 확대 검토(예: 단말기 필요 없는 미국 플로리다 SUNPASS 1개당 \$4.99. 그림 참조)



### 점검요약 및 제언

- 마창대교, 거가대교 장애인복지카드 결제시스템은 도입되었으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

입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와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민생규제 혁신과제와 지역맞춤형 과제 발굴(Ⅲ-3-44-③)

- 신산업·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등 네거티브 및 테마형 규제 발굴로 혁신성장 지원
- 도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공모로 현장중심 생활불편 규제 혁신
  -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 18년 과제발굴 및 해결 246건에 대한 진척 상황 점검 필요(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

### ■ 점검요약 및 제언

-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한 보다 창의적인 과제발굴과 해결이 요청됨

#### 과제 45

### 적소 적재의 인사혁신과 칸막이 없는 행정

### ■ 적소적재의 인사혁신(Ⅲ-3-45-①)

- 적소적재 인력 배치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사운영
- 능력과 실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및 평가
- 공무원들의 참여·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협동하는 조직문화 조성

### ■ 점검요약 및 제언

- 2019년 상반기 인사에서 ‘업무에 가장 합당한 인재를 배치하는 적소적재 배치(과장급 3개 직위)’와 ‘도정 주요시책을 담당하는 업무 5곳에 직위공모제를 도입 실시
- 특히, 3명의 과장급은 도지사와 2인의 부지사가 직접 면접을 했으며 직위공모제 응시자 5명은 담당 과장이 면접을 했음
-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한 직렬별 간담회 시행
- 국내외의 선진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 성과관리 프로세스 정착 및 운영 패러다임 전환(III-3-45-②)

- 경남형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 도정 중요사업의 목표달성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는 평가체계로 전환
- 성과중심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직무성과의 피드백 강화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개발

## ■ 점검요약 및 제언

-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과제 46

##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

## ■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III-3-46-①)

-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문화 조성
- 인사고충 심사상담 및 양성평등 강화로 행정능률 증대
- 양성평등강화
  - ① 현재 도 내의 5급 이상 중에 각 급수별 양성의 비율 현황 파악 필요
  - ② 여성 공무원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또는 추계치가 있을 필요 있음
    - 국내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 장단기 파견(교환) 근무 및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지급

## ■ 점검요약 및 제언

- 현재 도 내의 5급 이상 중에 각 급수별 양성의 비율 현황 파악 필요. 여성 공무원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또는 추계치가 있을 필요 있음
- 국내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 장단기 파견(교환) 근무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지급 검토



## 제3부

# 중점과제의 점검

- 중점과제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중점과제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중점과제 서부경남 KTX 신성장경제권 구축
- 중점과제 R&D 체계 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중점과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 중점과제 저출생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기반구축



## 제3부 중점과제의 점검

### ● 점검방향

- 중점과제는 민선7기 경상남도 공약 및 이행계획 중에서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도지사의 추진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점검은 도지사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
- 도지사와 면담(2018.1.8.)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국 차원에서 충분히 이행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칭 '실국장책임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국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재조정 할 필요도 있음  
도정 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 여부

### 중점과제

## 경제혁신재원 1조원 조성 및 제조업 르네상스

### ● 진단과 의견

- 중점과제 1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등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도지사 등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함
- 주력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축 중 스마트화 관련 과제들의 경우 경남형 일자리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간 연계, 국책 연구개발 사업 기획, 전략적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스마트화 관련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의 경우 대학을 포함한 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통합관리 역할 부여, 중복방지, 육생구축기업 육성, 컨설턴트 활용, 운영인력 활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필요

### 중점과제

##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 ■ 도민청원제도(도민참여센터 포함)

- 2018년 경상남도 조직 개편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어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로 넘어감
- 2019년 1월 2일 조직 구성을 위해 공모 중임

## ■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사회적 대타협 실현(추진상황 Ⅱ-2-23-① 참조)

-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위원 수를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노사민정협의회를 3회 운영했고 노사민정 파트너십 아카데미, 노사민정 합동연수회 등을 추진했음

## ■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추진상황 Ⅲ-3-45-② 참조)

-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남도에 맞게 운영하는 방향
- 특히 과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부여

## ■ 기타 점검 필요 사항

- 도 홈페이지 도민소통광장 정책참여에서 ‘여민동락 패널 설문조사’ 및 ‘브라보 경남’ (구 흥준표 도정 시 도입) 등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변화 모색
- 현재 130여개의 각종 정책·심의위원회를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도 홈페이지 ‘도정위원회’에는 위원, 회의록 등에 대한 상세 정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도의 유희공간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개방형 공간 확대 조성 검토
- 경남도 내의 시외버스 수요 조사 및 교통망 체계 구축(예: 진주, 김해, 양산·창원 시외버스 노선 등 버스요금 수도권 광역버스의 3배 수준 및 버스시간 예측 불허)

### 중점과제

## 서부경남KTX 신성장 경제권 구축

- 진단과 의견
  - 예타 면제 통한 SOC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염두에 두고 서부경남KTX 사업의 효과, 지역민들의 제안과 반응 등을 검토하는 연구 필요
  - 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관련 위원회 활동 및 혁신도시 시즌2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도지사와의 장관의 정례 회의, 행정혁신과제와 협의)
  -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 향후 남북경제협력 대비, 호남 동부권과 협력을 통한 경제권 확장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의의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전남 동부권과 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경상남도의 로드맵 작성 필요

## 중점과제

### R&D 체계혁신으로 사업화 촉진

- 진단과 의견
  - 국책연구개발 투자 유치, 대기업 R&D센터 유치, 재료연구원 승격 등 지역의 R&D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국가 R&D혁신방안 연계한 지역주도형 R&D 혁신역량 강화’라는 관점을 견지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중앙부처 국비 건의 및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R&D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가칭 ‘경남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지역 연구개발 사업, 이를 통한 제조업 혁신,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
  -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 도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과제(공약 등) 등과 연계가 중요. 실국간 협의를 통한 체계화가 필요

## 중점과제

###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

#### ■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I-4-14-①)

- 먹거리 중점과제에 따른 농정국 내 ‘지역푸드플랜’ 담당 설치.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및 먹거리 담당과의 유기적 업무협조, 먹거리도민위원회 설치와 혁신적 운영 사례가 요구됨. 경남의 급식 및 먹거리 의제에 대해서 경남 교육청의 급식 담당자, 먹거리도민위원회 참여하는 민간 활동가의 이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상존하는 것 같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운영 방향과 방안을 상호 합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주로 소비지이자 먹거리 정책의 협력 파트너인 부산시와 울산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울경 협약 내용에 먹거리 의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와 협약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호 천명하는 유의미한 공동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봄. 광역별 도지사(시장), 의회위원장, 교육감이 함께 참석하여 먹거리 정의를 설정하고 공동실천방안을 선포하는 공동 컨퍼런스 등을 생산지인 경상남도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중 먹거리 의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등 국가 푸드플랜의 현장 확대에 대한 범정부적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경남형 푸드플랜, 부울경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논의 확산이

요구됨(예. 접경지역 농식품부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한 로컬푸드를 통한 군장병 급식체계 혁신 사례, 나주 등 전남지역 공공기관과 농식품부 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혁신 사례 등)

- 창원을 포함한 경남의 기업, 산단과의 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방안, 부울경 먹거리 공급원과 생산지의 연계 방안 혁신을 통한 부울경 로컬푸드 혁신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 필요(먹거리 정의 실천을 위한 식생활강사단 운용, 먹거리 취약현황(도농형) 파악, 생산-공급-소비를 잇는 다양한 공공형 청년일자리 창출 등)

### 중점과제

## 저출산 총력 대응 및 공공의료 기반 구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공공의료정책 담당 신설

- 2019년 1월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 2019년 3월 위탁 공모, 6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계획
- 2019년 운영 예산 6억 반영, 향후 운영비 년 10억 예상
- 2019년 1월 보건행정과 내 공공의료정책담당 신설

### 서부경남 혁신병원 공공병원 설치

- 서부경남 공공병원 필요성 보건복지부 제시 위한 정책용역 중
- ‘설립 운영 계획 및 건립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포함 추가 용역 예정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의체’가 정책자문 역할 예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2019년 3월 보건복지부 공모 예정
- 도 회계과,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경상대학교 병원과 협의 및 부지 물색 진행 중
- 병원 건립비용 민간투자 관련 넥슨재단과 협의 중
- 부지 확보 후 2019년 상반기 병원건립 운영위원회 구성 예정



##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조성

- 2019년 초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용역 예정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구성 예정
- 당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읍면동 건강위원회 매년 10개씩, 총 40개 확충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 편성

## ■ 점검 요약 및 제언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공공의료정책담당 신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
- 서부경남 혁신병원 공공병원 설치를 위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역할이 필요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부지 확보는 장애인복지과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액이 너무 부족해 대전시는 이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병원 건립 계획이 필요하며 예산 증액은 불가피함. 관련 예산 계획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구성요소임. 새로 신설된 보건행정과 내 공공의료정책담당이 권역 통합의료벨트를 전담하므로 보건행정과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대전에 설치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병원의 규모, 역할 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병원건립운영위원회 설치 시 장애 아동 학부모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치가 필요함
-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조성을 위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이 예정대로 구성되어야 함
- 읍면동 건강위원회 확충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읍면동 건강위원회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의 풀뿌리 주민참여기구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의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4부

## 점검결과의 요약 및 제언

- 1 점검결과의 요약
- 2 제언
- 3 자문위 운영의 개선사항



## 제4부 점검결과의 요약 및 제언

### 1) 점검결과의 요약

#### 총괄

##### ● 도민의 욕구

- 최근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의 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전국적 국정 수행에 대한 언론의 평가 등을 종합하면, 경남도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지지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평가한다.
- 금년 1/4분기중에 예정된 공공투자 프로젝트 확정 (서부경남 KTX), 4월 3일 시행될 창원 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정당평가이기는 하나, 김경수 도정 운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 지향

-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비전,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의 운영원리, 3대 목표와 12개 전략, 6대 중점과제는 시대적 과제로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향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비전은 경남도정의 정신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운영원리를 토대로 경남의 사회와 공동체, 도청의 조직과 공직자, 경남을 에워싼 행위자들이 상호 관계를 통해 주고 받는 관계의 역량을 의미한다. 정신과 역량을 기반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전략, 과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정신과 역량, 목표는 상호 연관된 유기적 관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 경제 고용 전망

- 경남의 잠재성장율을 전국적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2.8-2.9% 수준이고, 금년도 경남의 경제성장 전망은 1% 초반 수준으로 평가한다면, 잠재력에 걸맞는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 또한 고용전망은 전국적으로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나, 경남은 조선산업의 회복, SOC사업을 통한 건설업종의 개선, 공공분야에서의 정책효과에 힘입어 2018년도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것이 곧 수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의미하기보다는 악화를 막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 ● 재정승수 추정

- 경남도 재정을 이전소득과 사업지출로 나누어서, 도내 GRDP 효과를 추정해 보면, 즉 순

수 이전지출은 1.05, 사업지출은 0.45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원용하면, 현재 경남의 민간 경제력은 위축되어,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 ■ 환경와 전망

### ● 경제 상황

- 도지사는 스마트, 플랫폼, 사회적 경제의 세가지 축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내걸었다. 기업과 가계, 도정이 경제성장을 위해 해야할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정립하여야 한다. 소수 독점, 저성장, 불평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접근의 확대, 공유재의 확대, 사회이동의 활성화, 불로소득 기회의 차단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 ● 인구감소

- 경남은 노령화와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청년인구의 역외이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청년 중년층의 삶의 질 향상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경남도의 중점과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정의 핵심 조직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 의지가 중요하며, 출산 육아 다양한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해서는 연결과 데이터 집적, 인공지능을 결합한 복지 보건정책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혁신 친화적 민주주의

- 경쟁적 시장체제에서는 창의성을 함양하는 학습 보다는 위험 회피적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경남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호황의 관행을 유지하며, 사회혁신에 담을 쌓아왔다. 지난해에 시작한 경남도정은 사회혁신의 기회로 다가왔으며, 마을,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청년, 시민사회의 5대 동력을 중심으로 참여와 협치로 사회혁신을 꾀할 것이다. 사회혁신은 공공재의 확산과 더불어 효율성 증대, 행복감의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 ● 일자리

- 재정적 투입이 지역내에서 선순환하여 지역내 인재 양성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가동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분야(문화 관광 스포츠산업/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 ■ 재정의 새로운 활로 모색

### ● 국고의 적극적 활용

- 경남의 자체 재정 수입이 낮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수적이다.

- 도정과제 1인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은 2018년도에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중소기업 시설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1조원 조성 (2022년까지), 2018년은 55백억원, 2019년 7천억 원의 계획으로 나타나 있으며,
- 도정의 노력으로 예년에 비해서 6천억 원 이상이 증액된 2019년도 국고 보조가 통과되었으며, 이 중 도지사의 정치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도 2천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재정 상황 점검

- 그러나 도 자체적으로 본다면, 전반적 경기하락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 아울러 외부 차입도 1천억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점검은 물론 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활력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아울러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 중앙부처 기금과 지역 금융을 통한 자금 유입

- 지역금융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이는 재정 소요의 문제보다는 도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정책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포용사회, 자연과의 공존 전략에 재정 갈증

-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 도정과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아울러 에너지 전환사회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 수소차는 미세먼지 절감과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한다.

## ■ 조직간 협업과 통합적 정책

-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집합재를 제공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에 그 핵심 임무가 있다. 특히 강력한 사회보장이라는 집합재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더욱 촉진시킨다.

- 도정 내 협업

- 이는 행정부내의 조직간에도 마찬가지로의 논리가 적용된다. 조직이 속한 사회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조직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도청내 부서간 협업, 부서간 경쟁보다는 협력, 도가 시군에 정책 컨설팅능력배양, 도의 산하 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조성, 이런

조직행태를 바꿀 수 있는 고과평가, 인사배치, 승진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경수 도정이 사회 혁신과 행정혁신을 기치로 걸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외부 기관과의 협력

- 김경수 도정은 과제 42에서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화를 적시하고, 동남권, 서울시, 전라남도, 창원시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과시되고 있으나, 이것이 협력사업으로 가시화되고, 실질화되는 과정을 도정은 감독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협업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는 정책이 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 실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김경수 도정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진주혁신도시, 동북아 물류 플랫폼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 통합적 정책

- 부문별로 단절화된 정책수립과 집행은 관료조직의 병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상급조직의 권한 강화, 성과 평가 등의 해결책이 기존 해결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정 리더십의 통합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적어도 도의 3급이상의 관료 (실국장급이상)들은 정책 사고에서 통합적 체계적 문제해결적 사고를 통해 정책을 생산 집행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부경남 KTX사업과 진주 통영거제지역의 경제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과 도시재생 등이다.

- 도민 참여

- 아울러 도민 참여에 대해서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운영원리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직자가 명심하여야 할 원리이다.
- 공공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시민이 참여하는 ‘불량경관 양호경관 감시 사이트’개설 등이 사업 영역의 예시이다.
- 이러한 도정 철학과 동시에 자료의 데이터화, 정보공유, 정보가공에 대한 인공지능의 발달, 거래시에 나타나는 보안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등장과 같은 기술적인 독해능력을 공직자는 갖추어야 한다.



## 2 제언

### 정책 제안

- 부진한 도정과제
  - 과제 23 노동자 권익보호에 포함된 생활임금제 논의가 논의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부경남 KTX의 준비와 더불어 도내 교통에 대해 경남도의 역할에 해당하는 광역교통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과제 35). 이는 갈등유발적이기는 하나, 문제해결에 따른 도민의 편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제로페이 도입
  -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성과 체감과 혁신의 지속적 성취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도입, 사람 중심 일터만들기, 미세먼지 해결, 건축가 자문제 도입이 우선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가맹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창원에서 시작되었고, 시군의 동참을 호소하였지만,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가맹율이 적어도 6개월내에 10% 수준을 달성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상품권과 결합시키는 과제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 스마트 공장의 보급과 동시에 일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정과제 12의 중소기업 고용투자환경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이는 경상권의 경우에 “대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일자리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라는 정책 제언을 수용한 것이다 (고용동향 브리프 2018. 11월호).
- 미세 먼지 대책
  - 미세먼지 대책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기관과 지역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교육청과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오염저감, 대기오염총량제, 친환경차 보급, 신항만의 미세먼지 저감, 주거지내 숲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주거환경개선, 신산업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주거 및 휴양 산업)을 도모해야 한다.
- 공공건축가제도
  - 아울러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의 지원 사업은 물론, 시군에도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되기를 촉매할 수 있다. 우선 시범사업 TF팀 구성을 구성하여,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500억), 진주혁신센터(300억). 동남관리공단전시장 3곳 중 1곳에 시범운영할 것으로 제안한다.

## 2019년도 도지사 중점 추진 과제

- 도정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준비태세를 갖추고, 도지사가 취임 즉시 추진하기 시작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성과를 내고 있음. 또한 서부경남 KTX도 정부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 다만 R&D 체계혁신은 상대적으로 착수가 지연된 상황이라, 준비 및 착수하기를 권고함.
- 금년도에는 일자리, 민생과제가 난관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시행하여야 함. 특히 조선업 회복에 따른 고용회복을 가속화하고, 공공서비스 일자리, 추가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서서히 확대시켜야 함.
- 사회혁신과제는 장기간 숙성을 요하고, 통합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요체임. 조직개편에 이어, 조직운영 개선, 그리고 인사체계의 혁신을 착수하는 것이 과제임.
-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인구감소, 저출생, 의료접근, 건강한 먹거리 순환 등은 주기적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혁신의 과정과 성과

- 혁신의 3대축
  -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양날의 축을 통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비전을 내 걸었다. 도정 혁신은 사회혁신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정이 혁신의 진원지가 되기 위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견인하기 위한 지향이었다. 혁신은 사람, 조직, 기관의 혁신을 통해 개방, 협치, 성과로 나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도정의 혁신은 공무원의 혁신과 도정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학습의 기간이 필요하고, 정책에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여, 정책개시 직후에는 기존 업무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한다.
- 도정 성공의 핵심
  - 프로세스 혁신, 핵심 그룹 상호간의 소통과 공유 팀워크, 상호 권한과 책임의 존중, 성과의 지속적 창출이 도정 혁신의 핵심이다.
- 혁신과 민생경제
  - 저성장 경남에게 혁신정책은 체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치적, 사회적 불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목표 1, 전략 3)을 활성화하여, 도민

들의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소득 양극화의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 도정 리더십의 혁신 정책은 선의와 성실성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속도, 분배 측면에서의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강인한 리더십 전략을 가질 때 그 성과가 나타난다.

- 전략의 세가지 기조

- 경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화해의 접경지 수혜, 수도권 인접지 수혜, 소프트파워 잠재력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이에 기존의 산업을 회복하고, 스마트화하며, 미래 산업군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중소조선소의 회복,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항공산업과 희유금속과 세라믹을 통한 소재 산업 육성이 바로 그것이다. 회복,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3 자문위 운영의 개선사항

#### 전문위원

- 거시경제 점검반 운영
- 전문위원 구성: 물류, 인구정책, 안전재해재난
- 2/1일자로 위촉 준비 (휴면 위원 처리, 신규 위원 위촉)

#### 자료

- 경제혁신분과: 대체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자료를 얻기위한 추가적 노력이 자칫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 상황도 지적되었다.
- 참조하지 못한 자료: 지사님이 2018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점검 회의에서 지적한 애초의 지사 생각과 다른 도정 4개년 계획과제에 대해 언급, 그러나 관련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반영하지 못함
- 경제혁신추진위, 일자리위, 사회혁신추진단의 자료,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의 이행과제 추진상황 자료를 접근가능하게 해주시기를 요망

#### 도청과의 협력

-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제시
- 도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와 각 실국의 도정4개년 계획에 대한 정기적 회의 개최 검토
- 1월 15일 도정자문위원회 본회의 이후, 지사와의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분야별 과제별 책임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참조토록 할 것임
- 분과회의는 공문으로 회의 소집, 안건, 일시를 안내하고, 정책개발평가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회의록을 작성해주기 바람
- 분과회의에 도지사가 참석하여, 가능하다면 분기 1회 정도, 위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 해당 국과에서 자문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역할 그리고 책임 자문위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정책기획관이나 해당 국장이 문서로 구성원 전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해 주기 바람

## ■ 추진 및 환류체계

- 현황: 말, 말, 말!

위원1)

위원들 ; 제발 우리의 제안을 반영해라.

공무원들 ; 우리는 우리일을 하고 있다. 자문만 해라.

공공기관 ; 일단,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지만, 결정은 공무원 한다

위원2)

A교수; 보다 많은 R&D를 이곳에 투자해야 하며, 많은 신규과제를 이쪽에 생성해야 됩니다. (강하게 발언)

B본부장; 교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신규 RFP가 나옵니다. 자세한 확인 바랍니다.(웃으며 반박)

위원3)

“경제혁신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도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듯 합니다.” “공무원들은 의사결정권자 말만 따릅니다. 우리는 그냥 잔소리 하는, 현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 ■ 내부 운영상의 문제

- 위원회 내부적으로 도청자료의 공유
- 도정보고회 이후 도정자문위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해주시기 바람. 전체회의에서 향후 도정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및 구체적 운영 방안이 합의되어야 함 (2월말 운영위에서 논의 후에 결정 예정)
- 도지사와 전체 도정자문위원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도정자문위 전체회의 및 워크숍 또는 비공식 모임에서 가능할 것임
-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2월말 이전에 경제분과와 민생분과 - 경제부지사, 문화복지 분과 - 행정부지사 (2회에 걸쳐), 사회혁신분과 - 사회혁신추진단의 간담회를 개최하

## 기로 합의


- 조례개정 또는 규칙 제정으로 도정자문위 위상을 공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 기획위원회가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고, 경제혁신, 민생, 문화복지, 및 사회혁신 분과위 간사를 추가 배치
- 2019년도 1월-6월 점검보고서는 7월 10-20일 사이에 제출한다. 이 때는 1주년 도민보고회를 겸하는 것을 검토한다.

## ■ 제도상 문제

- 각종 자문위와 도정자문위와의 관계
- 분과 회의시에 사전 회의를 정책기획관실과 공유, 회의록 공유, 회의 수당 지급 건

## ■ 과제 발굴 및 수정 프로세스

- 정책과제 발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도청내의 각종기관들), 이를 모아서 정리할수 있는 플랫폼구축이 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實事求是
- 긴급과제, 장기과제, 수정과제를 위한 내부 전문가 회의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 (경발연과는 연 5차례 내부 워크숍 가능하도록 협력/ 정책기획관실에서 방안을 마련)



부속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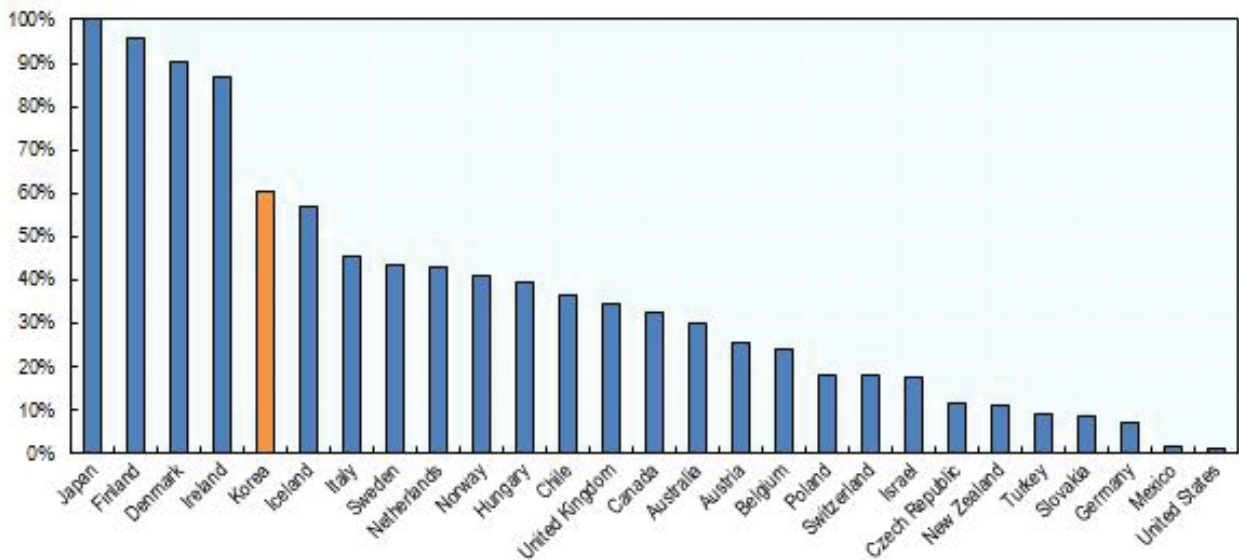
## 기술변화가 경남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 일자리와 경남형 일자리

- 공약 작성, 인수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경남형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고용이 보장되는 스마트화” 그 방법으로
  - 첫째,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혹은 비정규직화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화를 하려면 노동자 연대기금(중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사노위가 지역, 기업노조 차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노조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합의. 최근의 협력이익배분제, 산별 연금 기금 등의 방식으로)
  - 둘째, 새로운 고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지만 스마트화로 없어지는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생긴다면 효과가 없음(아래 [그림] 참조).

[그림] 수도권 지역의 창직(Share of net job creation in capital regions relative to total job creation, TL2regions, 2006-2016)

(단위: %)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OECD (2018), OECD Regional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region-data-en>

- 따라서 사라지는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자. 경남에서는 그 방법으로
  - ① 제조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방안: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 ② 사회적경제 방식: 사회적경제는 기업조직의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시장경제 기업과 차이가 나는 것,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안전망을 갖추어서 숙련을 유지하고 보존함..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와 신설 등에 의한 일자리

- 고용위기 극복은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는 장치

\*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경남의 역외유출 규모는 2016년 기준 지역생산액의 12.8%(약 12조 205억원 정도)이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상황. 보고서는 글에서 제시한 직주불일치,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원인)들(예를 들면 지사-본사의 공간적 불일치,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내 인력수급, 정주여건 개선 정도)에 의해 소득의 역외유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음.<sup>1)</sup>

● 광주형 일자리

- 고용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을 고용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이 민주적으로(노동권의 보장, 주주가치경영의 문제점 극복 등)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됨..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를 받아낼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통해서 하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 기존 대기업이 인건비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고 정부(지자체)가 반을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 청년 일자리

- 청년들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배우더라도 서울도 떠나는 것이 문제.. 지역에서 청년들이 이와 관련된 창업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디지털 공유자산 베이스 PtoP생산, 서울에서 불러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여기서 살 수 있게 작업장을 만들게 하면서 수당을 주고, 창업. 청년 창업 현실은 지방에서 준비해서 서울가서 발표하고, 지원금 받고 서울에서 창업하는 방식의 거꾸로 된 방식, 소셜벤처 창업도 지역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 동떨어진 소셜”.

---

1) 산업연구원,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KIET산업경제분석, 2018.11.23

## 조선산업 위기대응

### ■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 첫째, 대형조선소에 공공발주와 선박펀드를 이용해 일감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그러나 대형조선소들이 혁신적으로 나서면서 추격(catch up)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
  - 대형 3사는 여전히 금융기관과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비용감축만을 목표로 구조조정 중
- 둘째, 중형조선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음
  - 정부는 중형조선소가 LNG연료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지만, 중형조선소들은 그런 연구를 내부화할 자원이나 경험이 없음
  -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조건 완화도 액수가 작아 중형조선소 선박 수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 RG보증과 관련한 자체 세미나(2019년 1월 7일) 결과의 반영 여부

### ■ 장기적인 대안 모색 방안으로서 경남조선재건기업

- 지자체와 정부가 가칭 ‘경남조선재건기업’을 3섹터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 경상남도가 현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성동조선·STX조선 지분 일부를 출자
  - 금속노조가 임금과 고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K-야드·LNG벙커링 같은 프로젝트를 집중해 준다는 것.<sup>2)</sup>
  - 참여 주체들의 리스크는 분산하면서 협력은 극대화하고, 무엇보다 채권 회수라는 금융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과 산업이라는 사회적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적 틀거리
- 기타 제안: 노동자연대기금(중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사노위가 지역, 기업노조 차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노조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합의.. 최근의 협력이익배분제, 산별 연금기금 등의 방식으로)

2) 한지원, “제조업 위기, 경남 조선업 재건에서 실마리 찾자”, 매일노동뉴스, 2018.11.29

## 스마트 일자리

### 스마트일자리 보완 정책 제안: '일터/작업자의 스마트화 + 인간화'

- 동 사업을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더욱 키우는 보완적 정책기획이 필요함
  -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 사업의 모델이 된 독일의 '산업4.0' 사업에서는 '노동4.0'(스마트 일터) 사업이 병행되며, 두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사업으로 전개
  - 일본에서는 현장력(現場力)이라는 이름으로, 제조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품질 개선을 중시하면서, '현장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중시 (토요타 생산방식, 일본식 품질관리)
  - 우리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영세기업/중소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2/3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최저임금인상 및 주52시간 정책의 후속·보완 조치로, 중소기업들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즉 품질-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숙련-기술력 향상(현장능력 구축)과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 정책 필요 ==> 중소 제조업체들이 제조현장(일터)에서 기술력+품질력(=현장능력)을 키워야,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을 계기로 발생하는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산업 구조고도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
- '일터/작업자의 스마트화 +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추가적 정책 기획이 필요

### 수정보완된 정책의 목표

- '사람 중심의 일터 만들기' 정책 사업
  - 제조업의 일터(공장)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권위적 노사관계(꼰대질/갑질), 비합리적 업무 관행을 척결
  - 생산현장의 기본인 3정(정위치, 정품, 정량)과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습관화)
  -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 조성(안전한 일터(산업공단 공장에서 화재 발생 빈번) 만들기, 청년·여성 인력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일터 만들기)
  - 과학적 관리 : 공정에서 낭비요인 제거, 공정별 최적화, 노동인력의 다기능화
  - 직무 숙련 향상과 체계화 : 현장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이 축적한 경험(암묵지)의 체계적 매뉴얼화 + 숙련 기능인력(기능장·명장)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명예 부여
- 추진 배경
  - 청년들이 중소 제조업체 취업을 기피하거나 이직이 잦은 주요 원인은 - 낮은 임금 이외에도 - 낡은 공장·작업 환경과 산업단지 환경, 그리고 낡고 비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직무

- 숙련 관리, 거기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미래전망의 암울함 때문
- 중국과 동아시아의 빠른 산업화에 따라 제품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저임금 + 단순조립가공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는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업그레이드가 필요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공장)이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작업방식이 스마트하게 이루어지고, 작업자들(기능인력 및 기술 인력)이 스마트해지고, 또한 처우와 노동환경이 스마트해져야 함
- 스마트공장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이, 일터의 혁신 즉 공장(제조현장)에서 생산공정과 물류,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그 개선능력(현장력) 구축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다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 수정보완 정책 추진방향

**추진 방향 : 생산현장에서 능력 구축과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슬로건 : 일터의 르네상스 = 일터 혁신 = 스마트 일터 + 스마트 노동**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능동적 참여 의지(일터의 개선 의지)를 북돋아 생산공정과 물류, 작업방식의 개선
  - ‘생산현장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일자리 질’의 동시개선
  - <청년 + 중소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일터혁신 → 일자리 질 개선 → 청년 세대의 유입 → 일터의 개선과 혁신능력 구축 → 일터의 추가혁신
- 생산현장의 기본인 3정(정위치, 정품, 정량)과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습관화)
-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한 일터(산업공단 공장에서 산업재해, 화재 발생 빈번) 만들기; 청년·중고령·여성 인력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일터 만들기, 등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경개선 노력 제고
- 현장이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적인 작업공정과 물류, 일하는 방식의 과학적 분석과 과학적 개선방안, 경험 축적, 암묵지의 명시지화 노력, 다양한 작업의 보이기화를 바탕으로, 작고 점진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 물류의 개선, 재고의 최소화 등과 더불어, 현장에서 과학적 관리능력과 기술지식 흡수·학습 능력 구축(=혁신 능력 구축)
- 생산현장 관리자들(직장, 반장, 조장, 주임 등)의 작업공정 및 개별 작업관리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을 통해, 이들을 지식노동자화, 쉐어엔지니어화(이들의 직무기능의 과학화와 과학의 직무기능 의존성 강화), 그리고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

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과 문제의 탐지능력, 문제의 원인진단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구축 (=혁신능력 구축)

- 현장의 학습-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의 구축 : 현장 노동자들이 신제품과 서비스, 시장, 공정, 품질 등에 관한 지식과 작업방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가운데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능력, 이를 학습-흡수하여 응용하는 능력을 구축(=혁신능력 구축)
- 직무숙련 향상과 직무숙련의 체계화 : 현장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이 수십년간 축적한 경험(암묵지)의 체계적 매뉴얼화;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명예 부여

## ■ 수정보완 정책 추진체계

- ‘스마트 일터’ 정책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고 그것이 기존의 ‘스마트 공장’ 정책사업과 병행하고 그것을 보완되도록 하는 구체적 정책기획이 필요
  -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스마트 일터 혁신 사업단>(또는 ‘일자리 르네상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
- 스마트 일터 만들기 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 : 제조 대기업에서 다년간 기술-품질 개선과 혁신경험을 가진, 20년 이상 현장경력을 가진,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준비 중인 생산현장 출신의 직장, 반장, 그리고 생산 엔지니어들의 경험, 노하우,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스마트 일터 + 스마트 노동 만들기 통합사업단을 꾸려, 생산현장 관리자-엔지니어 및 기능공 출신의 20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된 스마트 일터 자문단과 함께, 생산현장의 진단(산업재해발생 위험, 생산현장의 기본질서, 기술-품질 개선과 혁신의 여지가 있는 영역 확인, 인력관리-노무관리의 합리성·과학성 진단), 생산현장의 개선과정 지원,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 + 현장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의지 고무방법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년 이상의 풍부한 기술-경영 경험과 지식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생산 엔지니어와 생산현장 직장, 반장 출신들(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로 엄선하여 스마트일터(일터혁신) 자문단을 꾸리되, 이들에게는 연봉 6000만원~1억원 가량의 보상을 해주고, 이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되어 자문 활동을 하되,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터득하게 함
  - 1개 업체당 자문단 2인 1조로 3개월~6개월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후에도 월 1회 정기방문을 통해 생산현장의 공정, 물류,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작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형의 인력관리-노무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자문

-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현장혁신 사업을 이번 기회에 체계화·조직화하여, 그것을 확대 : 국내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하청협력업체들(주로 1차 하청기업 =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품질개선과 기술교육, 일터 개선(정리정돈 등)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바, 정부(지방정부) 지원을 통해 이를 2차, 3차, 4차 하청기업들(주로 중소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업의 성과를 하청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들의 생산현장 혁신과 기술-품질-생산성 개선 모델에 대한 사례발굴을 통해, <한국형 일터 혁신>과 그 개선의 유형과 방법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전개
- 1단계 사업에서 동 사업이 업종-산업별로 1~2개의 모범적인 개선 사례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는데 집중; 그것이 성공할 경우, 그 성공사례를 타 기업들이 모방·학습하여, 저절로 크게 확산
  - 1단계 사업의 성공에 즈음하여, 그 정책이 만들어내는 중소 제조업 일자리 질 개선을 정책적으로 홍보하여, 청년 후속세대의 중소 제조업체 취업을 유인

## 도정자문위원회 위원 명단(30명)

위 원 장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운영위원회 위원장)
부 위 원 장	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기획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경 제 혁 신 분 과 ( 7 명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현규 변호사 박민원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유남현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정석찬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조영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민 생 분 과 ( 5 명 )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김남길 경상대학교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교수 김훈규 사단법인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기획위원)
문 화 복 지 분 과 ( 1 0 명 )	장동석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분과장, 운영위원회 간사)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기획위원) 박명덕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운영위원)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어석홍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교수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기획위원) 이성기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기획위원)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과 교수
사 회 혁 신 분 과 ( 5 명 )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분과장, 운영위원)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운영위원) 이자성 경남공공 정책연구원 원장 정보주 진주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정원각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 사무국장(운영위원)
	최덕철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 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10명)	<p>이은진(위원장) 경남대학교 명예교수</p> <p>강재규 인제대학교 교수</p> <p>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p> <p>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제혁신분과장)</p> <p>심상완 창원대학교 교수(민생분과장)</p> <p>이시원 경상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기획분과장)</p> <p>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 민관추진단 단장</p> <p>최덕철 경남대학교 명예교수</p> <p>최상한 경상대학교 교수 (사회혁신분과장)</p> <p>장동석(간사) 경남대학교 교수 (문화복지분과장)</p>
기획위원회 (5명)	<p>이시원(부위원장)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 <p>김태영(간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p> <p>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p> <p>이성기 인제대학교 명예특임교수</p> <p>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p>